AUGUST 2023 Vol.393

나라경제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nara.kdi.re.kr

특별인터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슈
OTT의 빅웨이브 계속될까

연중기획
지역에서 '재미'있게!



특집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08

nara.kdi.re.kr
www.facebook.com/kdinara1990

ISSN 1227-8033

KDI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구석에 볕이 들 때

김은지

구석에 볕이 들 때
볕 맞이하는 먼지 입자들이
오르고 오르며 빛나는 것을 바라보는 동안

페달에서 발을 떼고
이어지는 내리막을 지나며
돌고래처럼 뛰는 바람을 품는 동안

서점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오래 바라보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다정하고
또 무심하고
또 허우룩하면

당신이 곁에 없어도
없어도 있는 것 같은
멀리서 날 보고 웃기 시작했을 것 같은

『고구마와 고마워는 두 글자나 같네』 중에서





일러스트 **이지예**

나라경제

2023년 8월호 통권 393호

특집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0 **경제활력, 민생안정, 체질 개선, 미래 대비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
김영훈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12 **적극적인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경제위기 돌파한다**
권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14 **중앙·지방 간 긴밀한 정책 공조로 지역경제 활력 뒷받침**
김태익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16 **높아진 국격에 맞춰 농업 ODA 확대하고, 국내 식량안보 강화에도 박차**
김영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18 **실물경제의 활력 높이기 위해 수출·투자·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20 **저소득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 인구구조 변화 따른 사회적 대응력 높인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22 **일자리 걱정 없이 안전한 일터에서 공정한 보상 받으며 일하는 노동시장 구축**
홍경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4 **국민 주거안정에 주력하면서 국가산단·UAM 등 통해 신성장동력 확충**
김배성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26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할 것**
김용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28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특별인터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0 **"K컬처의 인기,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이 보편적 공감 끌어낸 덕"**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보세요!

nara.kdi.re.kr
www.facebook.com/kdinara1990
nara_kdi
blog.naver.com/kdi_nara

이슈

OTT의 빅웨이브 계속될까

36 **기회와 위기의 롤러코스터 타는 OTT산업**
정덕현 문화평론가

37 **자, 오늘 저녁에는 어느 OTT로 시청해 볼까**
『나라경제』 편집실

38 **OTT를 요약으로 보는 사람들**
구현모 미디어 뉴스레터 '어거스트' 에디터

39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극장 밖'에 있는 관객을 불러오려면**
손진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팀장

40 **"선택과 집중 통해 해외진출 가속할 때… K플랫폼 경쟁력 확보 위한 지원 동반되길"**
노동환 콘텐츠웨이브(Wavve) 정책협력 리더

42 **광고 규제 등으로 불법사이트 수익원 차단해 저작물 불법 복제와 서버 유통 근절해야**
김우균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

43 **'콘텐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전략과 시장 조력자로서의 정부 정책 필요한 때**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연중기획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 ⑧

지역에서 '재미'있게!

46 **주민들의 삶 담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기대**
박주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47 **정(情)을 주고 사람을 얻는 강진 '푸소(FU-SO)'**
마혜선 전남 강진군청 푸소팀장

48 **"마을이 여행지가 되면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지속 가능해진다"**
조문환 놀루와협동조합 대표

50 **프랑스, 엄격한 기준으로 4만여 개 농촌관광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경제정책해설

52 **해외인증 국내 취득 더 쉬워진다!**
이민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팀장

54 **클러스터 중심의 지원체계 기반으로 유망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
이인홍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



세계는 지금

56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재정준칙 개혁에 나선 EU**
박진호 주벨기에EU대사관겸주NATO대표부 재경관



칼럼

02 시(詩)작
구석에 볕이 들 때
김은지 시인

60 독서의 문장들
우춘희 『깻잎 투쟁기』
반드시 들어야 할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
김혼비 에세이스트

61 당신 곁의 철학
한계상황, 돌파보다 돌입
허유선 『인생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철학할 것』 저자

62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왜 지금 인도네시아인가
고창현 KOTRA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 과장

64 강양구의 과학 토크
10대 시절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65 오늘도 미식
여름철 복숭아
이해림 푸드 칼럼니스트

66 빅데이터로 본 생활변화관측기
장바구니에 담기기 시작한 B급들의 생태계
신수정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수석연구원

67 1달 1음반
섬세하고 날 선 노래로 요즘 청춘의 감정을 훑다
배순탁 음악평론가





68 소비자 정보
어린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별 유산균 수와 종류 차이 있어
김수정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책임연구원

70 정여울의 나란히 한 걸음
추억을 여행가방 삼아 떠난다
정여울 작가

74 시평
첨단기술 '딥리스킹' 시대의 경제안보 전략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기구독자에게는 1년치(12개월) 외에 추가로 2개월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0,000원
- **정기구독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조동철 KDI 원장
편집인 홍두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이지은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자료개발실장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최지훈 혁신정책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기석 기획재정담당관
외교부 신건호 다자경제기구과장
행정안전부 홍성철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소정 기획혁신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강석 홍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백형기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과장
고용노동부 홍경의 기획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부 김배성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김용태 기획재정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기획혁신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성종원 혁신기획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선중규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임형준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유경숙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실 사무관
편집장 강지은
취재·편집기자 오성록, 홍성아, 신정아
감수 이재열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ISSN 1227-8033 08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23년 7월 31일(매월 말일 발행)
제34권 8호 통권393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기사문의 044-550-4674
제작지원·인쇄 경성문화사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월간 『나라경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지를 읽고 난 소감, 제안 등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nara@kdi.re.kr)로 보내주세요. 우편엽서에 의견을 적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세 분을 선정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2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팀 (우) 30149

7월호 당첨자
김은경(대구 달서구) / 서범석(서울 강동구) / 송나영(경남 밀양시)



특 집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대체로 개선되고 있다. 물가·고용 등 민생지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도 갈수록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향후 고금리 정책 영향 등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나라경제』가 각 부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봤다.



경제활력, 민생안정, 체질 개선, 미래 대비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경기둔화 등 유례없는 대외발 복합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위기 이면에는 민간활력 저하, 국가·가계 부채 급증 등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며 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민간·시장 중심 경제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 그 결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방만한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해 시장이 연착륙하고 있다. 13년 만에 원전 수출도 재개했고 민간활력과 정상 세일즈 외교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어려웠던 경제여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 21개월 만에 2%대로 둔화한 가운데, 고용은 역대급 호조세를 이어가는 등 민생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한편 성장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중심의 수출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등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 미국·중국의 성장세 둔화, IT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35조 원+α 규모 금융·외환 시장 안정 조치 탄력적으로 운영, 물가 안정세 안착시키고 맞춤형 일자리로 고용 안정 도모

우선,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 등에서 15조 원 이상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 35조 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특히 하반기 경기반등의 핵심인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350억 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수출·수주 지원을 추진하며,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3종 세트도 추진한다.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과감한 규제혁신 등으로 지역경제 중심의 경기반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고, 숙박쿠폰 지원, 외국인 관광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소비·관광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민생경제 안정에도 주력한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먹거리 할당관세 확대 등으로 물가 안정세를 확고히

김영훈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mosfkim@korea.kr



지난 7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착시키고 에너지 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통신비 경감, 서민금융 공급 1조 원 확대 등 필수생계비 부담도 경감한다. 임대차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주택구입·전세 자금 지원, 청약저축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도 적극 도모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확충과 약자복지 강화를 통해 튼튼한 민생안정 토대를 조성한다. 빈 일자리 해소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반지하 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전액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자산형성·일자리·교육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재기지원, 세제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하고 이민정책 개편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방안 마련

셋째,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R&D 예산은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15대 국가첨단산업벨트 적기 조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올해 내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신청을 추진하는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노사법치 확립,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인재양성 중심으로 교육혁신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조속히 수립한다. 아울러 서비스·공공·금융 등 3대 경제혁신을 가속화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상콘텐츠·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 외에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과점시장 등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노사·기업·보조금 등 경제 전반에서 법에 근거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노력도 병행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대응을 가속화해 나간다.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이민정책 개편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저출산에 대응해 혼인·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주택연금 인센티브 확대, 실버타운 활성화 등 고령사회 대응 기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등 정상외교 후속과제 추진, 공적개발원조(ODA) 대폭 확대 등 국제연대를 활용한 경제안보 대응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1년간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제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의 긍정적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적극적인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경제위기 돌파한다

지난 7월 4일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에는 민생경제 안정 과제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의 내용이, 경제 체질 개선 과제로 과학기술 도약 지원을 위한 R&D 지원 방식 개편 및 인력양성 강화,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 및 성과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래 대비 기반 확충 과제로는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혁신전략 로드맵 확대 수립 등이 포함됐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해 국민 부담 완화,
R&D 지원방식 개편 통해 과학기술 도약 지원

우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4대 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 양쪽 과제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이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직후인 7월 6일에 과기정통부는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 경감, 투자비용·설비구축 관련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고, 요금제 선택권 확대,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도입,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등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한 통신요금 인하와 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고품질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도록 5G 전국망 조속 구축, 6G 시대 기술 기반 조성,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조기 구축 등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둘째, R&D 지원방식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 도약을 지원하고자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R&D 절차·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31조 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아울러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유망 분야에는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않은 과감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책임 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계도전형 R&D 시범과제를 오는 10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만 국한된 우물 안 개구리식 R&D에서 벗어나도록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그간의 정상



지난 6월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전략 보고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양자과학기술로 이루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kks2127@korea.kr



외교 성과 등을 십분 활용해 미국, EU 등과의 R&D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일례로 내년부터 국내 연구기관과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함께 바이오 난제를 해결하고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공동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양자컴퓨터 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선박 등에 탄소중립 기술혁신전략 로드맵 수립

셋째,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의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중 과기정통부 소관인 양자컴퓨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사이버보안, 차세대 원자로 관련 주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양자컴퓨터의 경우 정부는 미국, 유럽 등 선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고자 관련 기술·인프라를 집약해 2026년까지 50큐비트급 한국형 양자컴퓨팅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2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시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 세계적인 챗GPT 돌풍을 계기로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AI 일상화가 촉발되고, 생성형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A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해 AI 윤리·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양질의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 추가·보강, 중소기업·대학 대상 대용량 컴퓨팅 자원 확대 등 AI 기술·산업 고도화도 지원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국가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에 국산 AI반도체를 접목해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도약을 지원하고, ICT시스템의 최적화·저전력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산 AI반도체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를 올 하반기부터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팹을 이용해 학생들이 설계한 회로도를 실제 시제품으로 제작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 칩(My Chip) 서비스도 하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지원되는 서비스로서 향후 실전경험을 갖춘 우수한 반도체 설계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국민생활·국가경제에 밀접한 영역으로 위협이 확산되면서 국가적인 사이버안보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기술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데이터·AI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신산업·가상융합 보안 등 4대 세부 중점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보호·탐지 중심의 수세적 방어를 넘어 위협 행위자 식별 등 보다 능동적·적극적인 사이버위협 대응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 EU 등 사이버보안 선도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동화와 탄소중립 추세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자력은 기존 발전뿐 아니라 해상 운송, 수소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대 시장 진입을 목표로, 가압경수로(PWR)식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뿐 아니라 용융염원자로(MSR) 등 안전과 성능 모두를 갖춘 다양한 차세대원자로를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넷째, 탄소중립 기술혁신전략 로드맵을 확대 수립한다. 최근 잦은 기후변화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탄소중립 분야의 기술 확보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17개 세부 분야에 대해 임무 중심 기반의 전략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다. 17개 분야 중 수소 공급,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무탄소전력 공급, 친환경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7개 분야 로드맵이 이미 수립됐으며, 남은 10개 분야 중 탄소중립 선박, 제로에너지건물 등 4~5개 분야는 연말까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로드맵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넷제로를 고려해 단기(2030)·중장기(2050) 측면에서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구분하고 각 시점별로 적합한 기술 목표치를 부여한다.

올 하반기는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무역장벽 심화 등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과학기술·ICT 혁신의 적극적인 추진과 투자 확대를 통해 위기를 공세적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중앙·지방 간 긴밀한 정책 공조로 지역경제 활력 뒷받침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등 대외여건 불안과 물가·고용 등 대내여건의 양호한 상황이 혼조된 가운데, 하반기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와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에 따른 요금인상 압력 등 부담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심화되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과제와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과제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정부와의 정책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극 협력해 중앙과 지방 간 경제정책 공조를 긴밀하게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및 인상률 최소화해
지방물가 안정적으로 관리

우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올해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또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입 측면에서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과 여유재원의 발굴 및 활용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 세출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인구감소 대응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소비투자 지출을 확대해 지역경기를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과 여유재원 발굴 통해
지방재정 가용재원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력, 인구감소 대응 등
필수 분야 소비투자 지출 확대해 지역경기 뒷받침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중앙부처의 규제 신속하게 발굴해
지역 현장의 불편과 부담 완화

둘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개월 만에 2%대에 진입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공공요금 또한 도시가스를 제외할 경우 상승률이 2.7%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지방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등 요금인상을 자제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분산할 것을 지자체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축제에서 나타나는 '바가지요금' 논란이 관광객 감소 및 상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서지 물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한카드와 연계해 민관협업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물가안정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김태익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taeik38@korea.kr



지난 7월 2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논란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서지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셋째, 지역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지난 4월 지역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중앙부처의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함으로써 지역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 중 하나로, 도심지 비행금지구역 규제 때문에 항공교통·드론 등 항공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금지구역 규제를 일부 완화해 업계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현장토론회 개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시급한 규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 구축해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주민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넷째,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추진해 지방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분야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지난해 11개 지자체에서 132개 기관을 101개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포털, 플랫폼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 개방, 공유,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 간 정보 공유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 11개 시도 및 중앙정부 모두에서 수립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이다. 기본계획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추가 특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스스로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자 한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 민생경제 위기 앞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일 수 없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해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도 중앙과 지방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높아진 국격에 맞춰 농업 ODA 확대하고, 국내 식량안보 강화에도 박차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식량구호를 요청한 지 60년이 되는 해다. 과거에 먹을 것이 부족했던 우리는 주식인 쌀 자급이 국가 차원의 최우선 목표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통일벼를 통한 쌀 자급과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 발전을 이뤄냈고, 현재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부터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이르는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식량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 유일의 모범 국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이후 WFP를 통해 매년 4~6개 식량위기국에 쌀 5만 톤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국제개발 비영리단체인 헤퍼(Heifer)와 함께 네팔에 젖소 101마리와 낙농기술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는 관개시설 현대화, 우수 품종 보급 등 농업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한편, 동남아 국가와는 스마트농업·농촌개발 등에서 협력하며 해당국의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세계 23개국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를 설치해 현지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아프리카 쌀 생산역량 높이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 추진

지난 5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격에 맞게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5만 톤인 쌀 원조 규모를 2024년에 10만 톤으로 확대하고, 아프리카에 쌀 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K-라이스벨트는 쌀이 주식이지만 자급률이 낮은 사하라 이



지난 7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8개국 장관급 대표들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ecopea@korea.kr



남의 아프리카 8개국(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의 쌀 생산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아프리카 기아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된 대규모 ODA 프로젝트다. 지난해 10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 지역과의 농업 협력 확대를 위해 기니와 카메룬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개발한 벼 품종의 생산성이 현지 종자에 비해 최소 두 배 이상 월등함을 확인했고, 해당 종자를 보급한다면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우리 종자와 쌀 생산기술, 인프라, 농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구상해 아프리카 국가에 제안했다. 아프리카 지역은 주식인 쌀 소비의 40% 정도를, K-라이스벨트 대상 8개국은 약 5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에게 쌀 생산 증대는 과거에 우리가 그랬듯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지난 7월 10일 서울에서 아프리카 8개국의 농업 장관급 대표와 케빈 우라마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신디 매케인 WFP 사무총장도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8개국은 K-라이스벨트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장기적인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2027년부터 매년 다수확 품종 벼 종자 1만여 톤을 생산하고, 생산된 종자를 현지 농가에 보급해 고품질 벼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연간 약 3천만 명에게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쌀 자급과 새마을 운동 성공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우리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프로젝트가 아프리카의 쌀 자급과 함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작물의 안정적 국내 생산 기반 마련해 식량자급률 제고

우리나라도 다른 관점에서 식량안보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쌀은 남아도는 반면 제2의 주식이라 불리는 밀은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이러한 가운데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국제 곡물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식량 생산·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불가피하게 수입이 필요한 물량은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 조달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쌀에 편중된 생산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에 필요한 작목을 재배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와 함께 밀·콩 재배 안정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표준 재배법 보급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국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비축 물량을 지속 확대한다.

가루쌀은 제분해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특징을 지닌 새로운 쌀 품종으로, 이름은 쌀이지만 가공적성과 용도는 밀가루와 더 비슷하다. 잘 갖춰진 기존 벼 재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재배할 수 있고, 겨울철 밀 등과 이모작이 가능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제분 업계는 밀을 제분하는 설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제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가루쌀은 공급이 넘치는 밥쌀 생산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으로, 정부는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7ha였던 생산면적을 올해 2천ha로 대폭 늘려 생산량을 1만 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생산단지 38개소를 조성하고 생산단지별 재배 전문가를 전담 배치해 현장에서 가루쌀 재배를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풀무원·삼양식품·해태 등 주요 15개 식품업체와 함께 다양한 제품을 개발 중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네 빵집 19개소에서는 가루쌀을 활용한 신메뉴를 만들어내고 있다.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충을 위해 우리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시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신속하게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계획이다.

그간 식량자급률은 지속 하락해 왔다. 1970년 86%였던 것이 2021년 기준으로 44.4%까지 떨어졌다.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제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농식품부는 올해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하고 2027년에는 55.5%까지 끌어올려 안정적 식량 공급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다할 것이다.

실물경제의 활력 높이기 위해 수출·투자·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주요 업계·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기업의 투자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킬러규제' 발굴하고 개선방안 적극 모색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 타임아웃제 7월부터 시행해 민간투자 촉진

2023년 대한민국 경제는 악천후 속에서 출발했다. 글로벌 경기는 무겁게 침체돼 있었고, 물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치솟는 복합위기의 한복판이었다. 그러나 어려운 안팎의 여건에도 민관이 한 팀으로 고군분투한 결과 올 상반기는 물가, 고용 등 민생지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실물경제 부문에서도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고대하던 흑자를 달성했으며, 외국인 투자는 171억 달러로 상반기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국내 경기에 큰 부담이던 국제 에너지 가격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반기 우리 경제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반가운 신호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 하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회복을 위해 수출 확대와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매진해 경기반등의 기운에 속도감을 더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 무역금융 공급… 하반기 중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 발표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은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비롯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대는 수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역량을 수출 플러스 전환에 집중한다. 로봇, 바이오 등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 자금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도 공급된다.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도 새롭게 단장해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앞당기기 위한 중국 현지 마케팅을 전개한다. 10월에는 광저우를 찾아가 '추계 수출입상품 교역회'를 열고, 연이어 11월에는 상하이에서 '국제 수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에 더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도 강화한다. 아세안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중동시장을 염두에 둔 LNG 운반선 등 수출전략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한편, 세일즈 정상외교 효과를 실질적 성과로 시현하기 위해 중동 데스크(MEKA; Middle East Korean Advisory desk) 설립, 폴란드와의 전기차·배터리 분야 협력 등 시장별 맞춤형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수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무역경쟁력 강화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 중 수출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강화, 수출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 등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물들을 담아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와 디지털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연내 1,500명 육성이 목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주요 업계와 협회, 경제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의 투자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이른바 '킬러규제'를 발굴해 규제별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작업을 적극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kai2050@korea.kr



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인허가 '신속허가'가 결정된 후 최대 60일 이내에 인허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속도가 생명인 첨단 분야 투자 경쟁에서 행정절차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규제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킬러규제 혁신 TF'를 통해 정부, 민간협회, 경제단체 등이 함께 규제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정부는 해외 첨단기업 인수·합병 등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 투자도 상반기에 달성한 역대 최고 실적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유치 노력에 나설 것이다. 국가 최고위급이 참석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R&D 사업을 신설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투자 지원과 국내 혁신생태계의 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해 국내 복귀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소멸'의 위기감과 싸워야 하는 지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각별하고 섬세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주도형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산업부도 이에 발맞춰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상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서 업체 관계자가 사족 보행 정찰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신설해
세제·규제 등에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우선 '현장 산업부'의 기치 아래 주요 지역별로 발굴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을 직접 순회하며 애로의 발굴과 해소에 나선다.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정책이라 할 만한 '기회발전특구'도 신설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인프라 확충 지원은 물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 다채롭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해 기업은 영업하기 좋고, 근로자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8월에는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편 방안도 발표한다. 30여 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통산업 중심이던 산단을 첨단산업과 신산업이 중심이 되는 현대적인 생활공간이자,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의 입주업종도 신산업,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더해 입주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자금조달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 등의 매매·임대 제도를 개편하고, 문화·편의 기능 중심으로 정주여건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 연준은 연내 2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와 반도체 경기회복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디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냈다.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산업부는 하반기 주요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 우리 산업이 비상(飛上)하고 실물경제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저소득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 인구구조 변화 따른 사회적 대응력 높인다

지난 7월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고용 등 민생지표가 양호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동시에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범정부적으로 우선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중장기 과제로 미래에 대비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약해 이를 약자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분야에 투자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 속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약자복지 구현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체계를 위한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에도 역량 집중

과도한 현금복지 지양하고
생애주기별 어려움 헤쳐 나가도록 서비스복지 확대

무엇보다 먼저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월로 예정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부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내외로 줄이는 방안을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취지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의 안전을 조속히 확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과 같이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 나아가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지원도 확대한다. 노인의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다양하고 연속적인 수요를 통합적으로 판정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여러 장애인 지원제도가 공급자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체계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포퓰리즘으로 비판받는 과도한 현금복지를 지양하고, 대신 생애주기별로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복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단순히 사회서비스의 양만 늘리기보다는 이에 대한 규제 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늘리는 것이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이다. 대표적으로 기존 복지제도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의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140억 원에 달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를 조성해 정책 취지에 맞는 서비스 제공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동, 교육 그리

백형기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vanpelt9@korea.kr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성북구의 한 소아청소년과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연금까지 3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중 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과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관련 위원회 운영, 과학적 재정 추계,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고민과 추진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연금개혁을 추진한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많은 사회적 진통을 겪으며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연금개혁을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합의를 통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이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상반기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해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등 수입 구조의 형평성 확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하는 지출·투자, 합리적인 지불·보상 방식 마련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 효율화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정책기획단 중심 거버넌스로 통합

끝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대응 여력을 확충하려 한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까지 네 가지를 인구정책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3분기 중에는 고령 친화 주거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4분기에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현재 여건에 맞춰 보다 실효적인 내용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거버넌스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통합한다.

복지부는 올해 초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 실현을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약자복지 확대와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매진해 왔으나 예상치 못한 정책적 난관도 적지 않았다. 올해의 절반이 넘어간 시점에서 그간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부처는 물론 민간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전문가, 현장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일자리 걱정 없이 안전한 일터에서 공정한 보상 받으며 일하는 노동시장 구축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고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상반기 노동시장은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역대 최고 고용률(6월 63.5%), 최저 실업률(6월 2.7%)을 기록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고용·노동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의 한 부스에서 취업준비생이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 지원하는 한편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대책 추진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통해 제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 현장 구인난이 심각한 6개 업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해 보완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업, 수산·해운업, 자원순환업 등 현장에서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많은 산업을 추가해 지난 7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고,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업종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지원금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칭)고용24'를 오는 11월에 시범 오픈하고, 기업 특성에 기반해 인력수급 진단, 컨설팅,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기업에는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올해 단순 외국 인력(E-9)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고용허가서를 조기 발급하고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인력 부족 업·직종을 분석해 허용업종을 신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여성·고령층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에 대해 재학 때부터 구직활동 때까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들은 원하는 취업서비스로 '직무경험 확대'를 꼽고 있으며, 관련 정보와 실제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재학 중 심층상담 및 직업포트폴리오 설계 등을 조기 지원하고, 올해 8만 명 이상의 청년

홍경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hge0415@korea.kr



에게 일경험을 지원하는 등 취업기회를 대폭 늘리고자 한다. 또한 취업 지연 청년 규모가 여전히 큰 상황을 감안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범위를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위험군'까지 확대한다.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최근 여성 고용률은 상승 추세이나 60%로 여전히 OECD 평균(64.6%)보다 저조하고, 임신·출산·육아가 집중되는 30대에 여성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는 등 임신·육아기 경력단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부모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하고자 한다. 한편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도 추진 중이다. 우선 서울시와 함께 인증기관 고용방식(일본형)의 시범사업(100~200명 규모, 1년 운영)을 하반기 중 실시하면서 현장 수요 분석 등을 병행해 다양한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나가겠다. 고령층 내에서도 성별·학력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개별 특성에 맞는 세밀한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재취업지원을 강화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하반기 중 발표,
산업안전 패러다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 추진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첫걸음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일관되게 확립해 왔다. 먼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산업현장의 주요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현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를 토대로 '공짜노동'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근절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면서 사업주의 자발적 청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 5월 발표해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조 운영·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체 조합원 등의 정보 접근성, 미조직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상반기 조선업에서 체결한 '원하청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다른 분야도 업종별 원하청 노사,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상생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 재정지원 등으로 원하청 노사 간 자율협력을 유도하는 등 '이중구조 개선대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시간 제도는 경직적인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 의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6만2천 명 대상 대국민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와 현장의견 등을 반영한 보완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OECD 평균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 기제인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현장에 안착해 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기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등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 툴을 개발·보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감독체계도 위험성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면 정비하면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일터에서의 안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보상받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주거안정에 주력하면서 국가산단·UAM 등 통해 신성장동력 확충

(도심항공교통)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은 완만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물가와 같은 민생지표들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들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에 일부 불확실성이 있고 급등했던 전세값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문제도 대두됐다.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문제 등 구조적 위기에 대비한 미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소홀할 수 없는 시점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 하반기 경기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미래 대비 등 크게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추진할 것이다.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전세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등 청년 주거 지원 확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그간의 금리 인상,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른 리스크가 잠재된 부동산 PF 시장 관리를 강화한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비율을 높여 은행의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PF 대출의 보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책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 350억 달러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전시회 등을 개최해 기업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고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다.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철도요금을 할인하고 도시순환 셔틀버스 제공을 통해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한편, 외국인의 방한관광 촉진을 위한 항공권 할인 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각 지역까지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범부처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비수도권 한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가 조기에 확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지원 등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요건을 각 1,500만 원 상향해 지원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물가안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7~8월간 경유 유가연동



올해 하반기에는 UAM의 안전성과 통합운용 검증 등을 위한 실증이 전남 고흥에서 시작된다. 사진은 실증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체 중 하나. ©고흥군

김배성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genupupil@gmail.com



알뜰교통카드 적립 횟수 월 60회로
확대하고 적립 마일리지 상향하는 등
대중교통비 부담 줄여나갈 것

저소득 고령층에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
함께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매년 1천 호씩 공급

보조금을 재시행해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중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적립 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적립 마일리지를 상향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비 부담도 줄여나갈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연내 10만7천 호)과 공공분양주택 뉴:홈(연내 7만6천 호, 수도권 1만 호 사전청약) 공급(인허가 기준)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규 택지도 신규 후보지 발표, 택지 지구 지정, 착공 등 지구별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들고 신속한 분양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성 있는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시행·운영할 경우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허용해 빠른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역전세, 전세사기와 같은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역전세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세입자 보호 조치 등 일부 조건을 전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한도 무이자대출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물류·버스·택시·해외건설업 등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력양성을 추진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특히 건설업은 '제2차 빈 일자리 대책'의 지원업종에 포함된 만큼, 국내건설의 경우에는 스마트 건설장비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과 안전 강화를 추진하고 해외건설은 청년 중심의 현장 훈련, 인턴십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다.

산단에 청년과 신산업 모여들도록 제도 개선하고
UAM 안전성·통합운용 검증 등 실증 시작해 미래 대비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입지규제, 인허가 문제 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추진해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신산업 분야의 기업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문화·편의 시설 등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복합용지 도입 절차를 간소화해 청년과 신산업이 모여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성과 통합운용 검증 등을 위한 실증이 전남 고흥에서 시작된다. 올해 실증사업은 내년 수도권 등 도심지 실증에 앞서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교통 관리 등 운용을 검증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한발짝 다가온 도심교통의 미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인구문제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청년 주거자산 형성, 고령화 및 지역소멸 현상 대응을 위한 노인 주거 지원, 지역정책 검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해 기업 투자여건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저소득 고령층에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2027년까지 매년 1천 호씩 공급해 나가고, 헬스케어 리츠 출시를 지원해 고령 사회에 맞는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할 것이다.

국토부는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부처인 만큼 올 하반기에도 국민의 주거안정과 교통비 등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성장 기반 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곳곳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할 것

지난해 해양수산 분야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해운산업은 처음으로 매출액 60조 원을 넘어섰고, 해운서비스 수출액 역시 약 50조 원을 달성했다. 또한 수산식품 수출도 역대 최고치인 31억5천만 달러를 달성해 수산업의 수출산업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해운·수산업 등 주력 해양수산업의 실적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와 맞물려 수산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 위축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올 하반기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해수부의 하반기 주요 정책방향을 정부의 4대 중점 과제인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미래 대비 기반 확충에 맞춰 소개한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92개에서 200개로 확대…
식탁에 수산물이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 철저히 관리

첫째,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 해양수산 분야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다와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실제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지난 2월에 실시한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10년 후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1년 이후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약 7만6천 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정점(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늘리고 연간 수산물 검사 건수도 지난해 4천 건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수산물 유통 과정을 고려해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섬 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필수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영을 개선하고 택배비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교통 소외도서가 40여 개 존재하는데, 올해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10개 도서에 교통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육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섬 지역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섬 주민들의 생활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둘째,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올해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은 일부 품목의 생산 부진과 가격 하락이 겹쳐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감소했다. 이에 하반기에는 해외 마케팅 등을 집중 실시해 수출 모멘텀을 회복할 계획이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 대상 바이어 매칭 상담회 개최, 국제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11월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을 개최해 국내 수산식품을 집중 홍보한다.

한편 2021년 기준 무역 의존도가 약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는 항만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이 99.8%에 달한다. 즉 항만은 국가 경제의 약 70%에 관여하고 있는 경제활력의 핵심 인프라다. 해수부는 항만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12월 국내 최초로 모든 영역이 완전 자동화되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부산항 신항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 항만은 기존 항만

김용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akyt1@korea.kr



대비 하역 능력이 최대 20% 향상돼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전망이다. 또한 항만 배후에 우수 제조·물류 기업을 유치하고 대형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7월부터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면적 제한도 과감히 완화한다.

AI 활용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전국으로 확대… '2023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

셋째, 해양수산업 전반의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 먼저 전통산업으로 여겨지는 수산업의 체질을 바꾼다. 어선어업은 복잡한 투입 중심의 규제를 시장 친화적인 산출량 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고, 감척을 대폭 확대해 어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양식어업은 오는 12월 부산 준공을 시작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센서를 통해 수온·수질 등 사육데이터를 측정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양식장 전반을 분석·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 양식어업의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선박산업도 디지털·친환경 신기술이 접목된 '해양모빌리티' 산업으로 본격 전환한다.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해 올해 하반기 성능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률도 제정한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해상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디지털 해상교통망도 구축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모빌리티 육성방안'은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9일 부산 기장군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착공식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넷째,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대비 기반을 확충한다. 먼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해 어촌의 미래 기반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어촌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며, 어가인구도 지난 20년간 64%가량 감소했다. 2020년에 조사한 삶의 질 만족도도 농촌과 도시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고, 어촌 경제·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어촌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및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어촌에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어촌신활력사업 지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다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수립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블루카본이란 갈대, 칠면초 등의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염생식물과 해초·해조류 등 해양 식생을 조성하고, 서·남해안권을 대상으로 탄소흡수형 해안 조성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또한 바닷속 식물이 군락을 이루는 해초대의 국내 분포 면적을 산출, 국내 온실가스 통계에 반영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블루카본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위기로 해안가 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연안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변화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관측·예측해 연안재해를 조기에 경보하는 '한국형 연안재해 대응체계(K-Ocean Watch)' 구축 사업도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람회장 부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는 한편, 카리브해 연안국가 및 태평양 도서국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발굴해 해양국가들의 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한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올 하반기를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분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지난 상반기는 중소기업에 쉽지 않은 시기였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고 위기로 시작해 상반기 내내 주요국의 지속적인 통화 긴축과 최장기간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이어졌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 금액이 역대 최고치인 1,033조 원을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들도 계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근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관측되고 있다. 지난 5월 고용률이 63.5%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6월 무역수지는 11억3천만 달러로 흑자 전환해 무역 부문에서도 청신호를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기전망지수(SBHI)는 88.7로 상반기 82.3 대비 6.4p 상승하면서 현장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하반기에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자 한다. 글로벌 혁신특구 안착과 중점과제인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고 혁신형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거래 문화의 재정립에 힘쓰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매출의 50% 이상,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벤처 50+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시작한 지난 5월 9일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면적 네거티브 특례규제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창업·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 확대

첫째, 글로벌 경쟁 속에서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 기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혁신 생태계다.

특구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특례가 적용돼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의 실증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클러스터와의 실증 협력, 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UL) 인증, 유럽 적합성(CE) 마크와 같은 해외 인증기관의 인증 획득 지원 등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실증과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신속하게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신산업 전용 보험을 신설해 신속한 사업화를 뒷받침한다. 올 하반기에 2곳 지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비수도권에 10개의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고, 향후 지역에서 유니콘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bluesky3@korea.kr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매출의 50% 이상,
전체 수출의 50% 이상 차지하는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11월 17일 시행되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둘째,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를 지속 확충할 예정으로 올해 9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롯데벤처스와 협업한 민간형 센터를 개소한다. 또한 현재 8조5천억 원가량 조성된 글로벌 펀드를 연말까지 9조 원 규모로 확대해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의 우수한 인재가 국내에서 쉽게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업해 창업 및 취업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을 통해 정부 관계자, 투자자, 기업이 어우러져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벤처생태계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다. 먼저 '민간 벤처모펀드'를 신속히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자금으로 구성돼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당국과 함께 세제 혜택을 마련해 '제1호 펀드' 결성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부여하는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제도를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으로 명시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불안정 없이 투자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11월 17일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발행 기준과 행사 요건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도 본격 도입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10월 4일 시행된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당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직권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처벌보다 계도 방식으로 제도의 확산을 추진한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동행기업 수는 6월 기준 1천 개사를 돌파했으며, 법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기업의 참여는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상담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통해 예비창업자 500명 선발·교육하고
지역 문화 기반의 로컬크리에이터 100개사 사업화 지원

셋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성,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로컬상권을 육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촉진을 위한 '동행축제'를 경제활력 캠페인으로 전개해 내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소상공인 창업거점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예비창업자 500명을 선발·교육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100개사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으로 유망 소상공인의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동네펀딩·매칭융자 등 민간의 투융자를 연계해 혁신기업가로의 도약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7만 개의 스마트 상점·공방을 보급하고, 매년 10만 명의 이커머스 소상공인과 300명의 기업가형 온라인셀러를 양성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총 3회 동행축제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은 물론 지역행사와 연계를 확대해 전국적인 경제활력 캠페인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개최한 '봄빛동행축제'에서는 약 1조1,9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하반기도 9월과 12월 추가 개최를 통해 연 매출 목표 3조 원 달성에 매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내수 회복세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일시: 2023년 7월 11일(화) 오후 2시
장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954	서울 출생
1980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1999~2020	중앙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편집국장·대기자·편집인
2011~2013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2013	국민훈장 모란장
2022. 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K컬처의 인기,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이 보편적 공감 끌어낸 덕”

취임하신 지 1년하고도 두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취임 후 중점을 두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문화에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펼치고 문화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청와대를 국민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이자 ‘K관광 대표 랜드마크’로 브랜딩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고, K콘텐츠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규제혁신, 해외진출 지원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왔습니다. 또한 K컬처의 인기가 방한관광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K컬처와 관광산업을 융합한 총력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을 문화정책에서 확장하기 위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컬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인기의 비결을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K컬처가 세계 시민들이 보고 배우고 싶어 하는 분야라는 것을 해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였던 스페인 마드리드 K콘텐츠 행사에는 34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예상 인원의 두 배인 1만1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같은 인기의 비결은 K컬처를 만드는 사람들의 독창적인 창의성, 파격적인 상상력 그리고 젊은 세대들과 종사자들이 K컬처에 주입하는 감수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꿈과 희망, 인류 보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텔링이 강력한 파급력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IT기술이 탑재돼 문화·예술·스포츠·음식·패션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K컬처가 거침없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전략산업으로서의 K콘텐츠 육성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요?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K콘텐츠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전략산업이자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입니다. 7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류 열풍으로 유발된 경제효과가 37조 원에 이르고, 취업유발 인원도 16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K콘텐츠 수출액은 약 133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100억 달러의 이차전지, 81억 달러의 가전 수출 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영향력은 라면과 같은 식품이나 화장품 등 연관 산업의 수출을 견인하는 프리미엄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은 연평균 26% 증가했고, <오징어 게임>에 노출된 라면은 1년 사이 수출액이 67%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K콘텐츠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내년에는 이를 1조 원까지 확대합니다. 10만 개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돕는 원스톱 거점은 2022년 10개소에서 2027년까지 50개소로 늘립니다.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콘텐츠 전문인력을 3년간 1만 명 양성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OTT서비스 환경 속에서 우리 콘텐츠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며, 또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 제작사가 IP(지식재산권)를 100% 보유하고 넷플릭스에 해외 유통 기회를 판매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의 OTT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도 이처럼 우리 제작사가 IP를 보유하고, 국내OTT에는 우선 방영권을 갖도록 해 제작사와 국내 OTT 플랫폼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투입예산은 올해 45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네 배 확대된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OTT콘텐츠까지 확대하고,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규제 혁파를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검정고무신 사건' 등 창작자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 저작권 법률지원을 총괄하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창작자들이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방문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예술인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더욱 강화됐고, 지난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정고무신 사건'과 관련해, 문체부는 인터뷰 직후인 7월 17일 그동안 미배분된 수익을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변경하도록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7월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출판사의 저작권 등록 말소처분을 내려 해당 저작권이 고 이우영 작가 유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외교에서 문화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한미동맹이 문화동맹으로 확장됐다고도 하는데요. 문화외교에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4월 미국, 6월 베트남 국빈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교의 결정적 장면에서도 문화가 핵심키워드로 작동했습니다. 지난 4월 맺은 '문체부·스미소니언재단 업무협약'을 토대로 스미소니언재단 산하 박물관에 국내 학예·연구 인력을 파견하고, 청년세대가 중심이 되는 단기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인력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역사를 여러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양국의 상호관계를 젊은 세대들이 조망할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 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미래세대가 한일 양국의 미래'라는 구상을 실천하고자 문체부는 '한일 미래 문화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관광·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MZ세대 교류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6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 때 베트남의 뜨거운 한국어 학습 열기를 느끼셨다면서요. 한국어 확산 전략이 있다면요?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중 가장 강렬한 장면이 바로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젊은 세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참석한 분들은 모두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해 대통령 내외와 통역 없이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체부는 세종학당을 세계 곳곳에 촘촘하게 공급하고, 브랜드가치를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어 교육의 양적 확대 외에도 공인된 교원 파견, 현지 교원 양성 확대와 함께 K컬처를 바탕으로 한 학습콘텐츠 다양화 등 한국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종학당의 실시간 화상 강의, 한국어 학습 스마트 러닝 앱과 함께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학습 지원도 확대해 나갑니다.

청와대가 개방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국민 품속 청와대'를 위한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 5월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 지금까지 38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청와대는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역사문화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대통령 역사, 자연수목, 문화예술, 문화재라는 고유의 콘텐츠를 살려 국민 품속으로 더 깊이 다가갑니다. 개방 1주년 특별전시에서는 역대 대통령 12명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역동적이고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조깅화, 타자기, 개량 독서대와 같은 친근한 소품들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찾아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208종 5만여 그루의 나무가 있는 거대한 자연 수목원입니다. 7월부터 '대통령의 나무들' 수목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별로 대표적인 기념식수를 한 그루씩 선정해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문체부에서 제작지원한 '6070 이야기예술인'의 이야기 배틀 TV 프로그램이 화제가 됐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노년층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훌륭한 창작자라고 생각해서 올해부터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노년층의 문화참여 열망을 충족하고 6070 세대가 창작 예술 활동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 이야기구연 배틀 서바이벌인 <오늘도 주인공> 프로그램이 문체부 제작지원을 받아 지난 6~7월 높은 관심 속에서 방영됐습니다. <오늘도 주인공>은 6070 구



연동화 아티스트들이 이야기 배틀을 펼치도록 한 것으로, <스트릿 우먼 파이터>보다도 격렬한 경쟁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방송에서 선보인 이야기 구연극은 수정·각색을 거쳐 올해 10월경 전국 순회 공연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어 자막을 지원하는 이야기 구연 영상을 제작·보급해 우리 전통이야기를 K컬처 콘텐츠로 전 세계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한편 엔데믹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세계인들의 우리나라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올 6월 기준으로 2019년 대비 60% 이상 회복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를 새로 선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방한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는 화장품을 주제로 '코리아 서머 뷰티 세일'이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K뷰티, K푸드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들을 적극 활용해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체 불가능한 무기인 K컬처를 탑재한 관광정책으로 전 세계의 팬덤을 K관광의 팬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내가 K관광가이드다' 선포식을 통해 청와대라는 매력적인 공간을 각인시키고, 그 인근을 테마별 관광코스로 엮어 적극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스포츠인 씨름의 부흥에 노력을 기울인다 들었습니다.

문체부는 2023년을 씨름 부활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1월 'K씨름진흥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씨름을 전통과 품격, 매력을 갖춘 국민스포츠이자 경쟁력 있는 K스포츠 수출 품목으로 키우고, K씨름을 K컬처의 핵심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이 "씨름에 대한 박보균 장관의 진심이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강릉단오씨름대회에서는 K컬처를 결합한 관람콘텐츠,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몰입감 있는 중계를 선보이며 씨름의 역동성과 재미를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관전의 재미를 더하고 기술씨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량급 신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씨름을 활용한 방송이나 콘텐츠를 통해 씨름을 보다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씨름 부흥의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은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도 다양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계실 텐데요. 투명하고 낭비 없는 보조금 집행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피와 땀, 눈물이 담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들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합니다. 문체부는 올해 부처 예산안 편성 시 민간단체 지원 보조사업을 전년 대비 대폭 삭감했고, 특히 한국문화축제 92억 원 등 비효율 방만 사업 예산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면밀히 검토,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깜깜이식 공모사업 선정, 방만 지출 등의 문제점도 여러 사업에서 적발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해 발표한 것도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부정한 보조금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말 문체부 내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주기적으로 감사해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부정 방만 비리 보조금 사업자의 명단을 내부 심의를 거쳐 공표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가 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특히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지은 『나라경제』 편집주간



이 슈

(Over The Top)

OTT의 빅웨이브 계속될까

어제 본 영상콘텐츠, 어디에서 시청했는지 떠올려 보자. 예상해 보건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플랫폼 아닐까. OTT라는 거대한 파도가 미디어산업에 나타난 이후 사람들이 극장이 아닌 곳에서 시청각 경험을 하거나 본편 대신 요약 영상을 선호하는 등 기존의 영상 소비공식이 깨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영상 제작과 방영 방식도 바뀌고 있다.

"전 세계 (넷플릭스) 회원의 60%가 한국 작품을 한 편 이상 시청했다"라고 할 정도로 K콘텐츠와 OTT산업의 시장경쟁력이 궤도에 오른 지금, 일각에서는 국내외 OTT플랫폼 간의 과도한 비용경쟁으로 시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라경제』는 OTT산업의 현주소와 소비트렌드, 극장산업의 미래, OTT플랫폼 업계 전략,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근절방안 그리고 향후 시장과 정책 부문의 과제 등을 짚어봤다. OTT의 빅웨이브, 계속될 수 있을까?



기회와 위기의 롤러코스터 타는 OTT산업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 막 태동한 OTT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전 세계 최다 구독자를 가진 넷플릭스는 2020년 12월까지 가입한 가구 수가 2억을 돌파했고, 2019년 11월 뒤늦게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플러스 역시 1년 6개월 만에 구독자 1억360만 명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국내 토종 OTT 붐도 일었다. CJ ENM의 티빙이 본격적인 OTT서비스를 시작했고, 지상파 3사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하는 웨이브가 등장했으며 유통업체인 쿠팡이 쿠팡플레이를 선보였다.

팬데믹이 초래한 비대면 소비 환경은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무한정 시청할 수 있는 OTT로 대중을 이끌었다. 극장은 텅 비게 됐고, 이미 만들어진 영화들도 극장 대신 OTT를 찾았다. 한마디로 OTT 세상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 콘텐츠 소비방식뿐 아니라 제작과 방영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OTT를 통해 글로벌시장에 진입한 드라마의 제작비는 규모가 갈수록 커졌고, 완성도 높게 만들어진 OTT 오리지널 콘텐츠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은 지상파 같은 기존 플랫폼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됐다.



지난 4월 27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한 건물에 한글로 적힌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작품에 자막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제작제 역시 필수가 됐다. 제작 기간은 늘어났고 완성도는 높아졌다. <킹덤>,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과 같은 K콘텐츠가 높은 완성도와 확실한 로컬 색깔이 들어간 차별성으로 전 세계에 팬층을 확보하게 된 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와의 공조 덕분이었다. OTT가 K콘텐츠의 체질을 바꿔버린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제작 자체가 어려워진 영화계 인력들은 OTT를 새로운 발판으로 삼아 콘텐츠를 제작했고, 영화는 물론이고 드라마에도 뛰어들었다. 영화감독이었던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자, 드라마에 회의적이었던 영화감독들도 대거 OTT 시리즈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준익 감독 같은 인물이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욘더>를 연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OTT가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주춤하고 있다. 전 세계 최다 가입자를 가진 넷플릭스조차 새로운 수익 모델로 '계정 공유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됐다. 디즈니플러스도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순 가입자 240만 명을 잃었다며 '비용을 줄이면서 창의성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해고 등의 인력감축을 포함한 긴축을 통해 손실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토종 OTT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웨이브와 티빙은 각각 1,217억 원과 1,19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왓챠는 매물로 나왔지만 매각에 실패했고, 대신 현대차와 협력해 신차에 왓챠 서비스를 탑재하게 됐다.

전 세계 OTT기업이 팬데믹으로 급성장한 후 현재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장 큰 원인은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과잉투자다. 그간 지나치게 OTT에 장밋빛 미래를 예상하며 경쟁적으로 과잉투자한 후유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수익모델은 거의 구독자 확보에만 집중돼 있는데, 경쟁 환경에서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한한 콘텐츠 생산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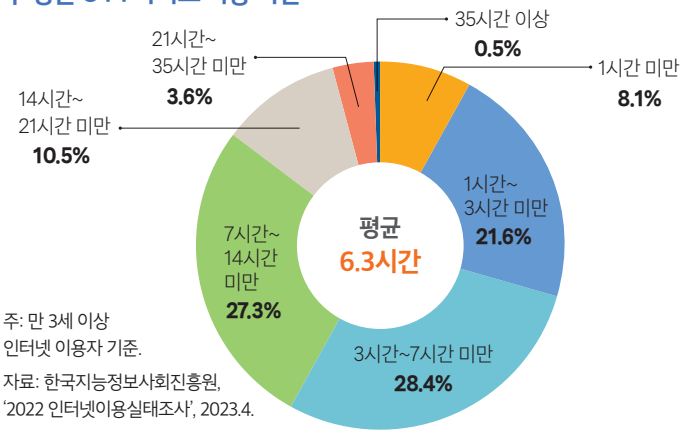
이제 OTT업계는 이 위기상황에서 수익모델 다변화와 더불어 해외 구독자 유입, 광고 수익 등을 통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제작비를 충당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으로 비용 줄이기에 고심하고 있다. 이미 OTT 세상은 열렸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다만 위기에 따른 변화가 있을 뿐.



정덕현
문화평론가
thekian1@gmail.com

자, 오늘 저녁에는 어느 OTT로 시청해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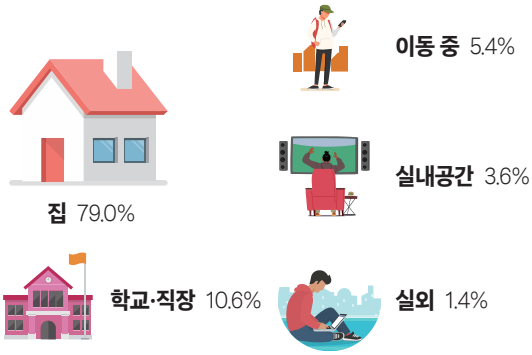
주 평균 OTT서비스 이용 시간



주: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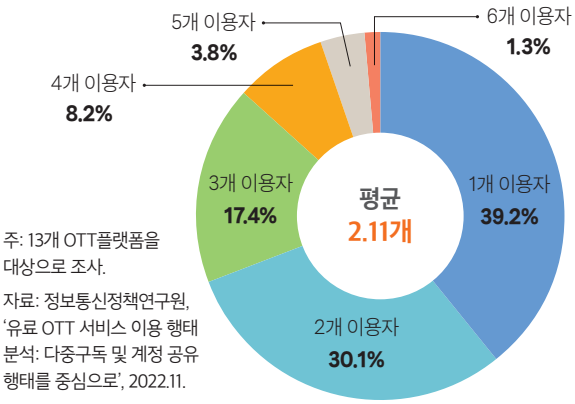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3.4.

OTT서비스 이용 장소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3.1.

유료 OTT서비스 다중 이용자 비중



주: 13개 OTT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료 OTT 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다중구독 및 계정 공유 행태를 중심으로', 2022.11.

OTT플랫폼에 바라는 개선사항

동영상 콘텐츠의 다양성	51%
구독료 조정(고화질 인상, 저화질 인하 등)	20%
추천 알고리즘의 개선	16%
소셜 시청 기능*	7%
8K 등 고품질 콘텐츠 제공	5%
AR, VR 등 실감형 기술 접목 콘텐츠 제공	1%

* SNS를 활용해 시청 소감을 다른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OTT서비스 변화와 콘텐츠 이용 전망 분석', 2022.9.



가장 많이 이용하는 OTT플랫폼(중복응답)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3.4.

정리 『나라경제』 편집실

OTT를 요약으로 보는 사람들

'맑눈광(맑은 눈의 광인)' 김아영 배우와 '젊꼰(젊은 꼰대)' 주현영 배우를 낳은 SNL 코리아는 어디서 가장 흥했을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튜브 쇼츠(shorts)와 틱톡이 아닐까 싶다. 본편보다 본편의 하이라이트를 본 사람이 많은데, 이는 대부분 쇼츠와 틱톡이 그 통로이기 때문이다.

쇼츠로 SNL코리아의 인지도를 높인 쿠팡플레이는 이 경험을 전략으로 녹여내, 자사에서 독점으로 중계하는 K리그의 흥행을 위해 '유튜브 K리그 크리에이터'를 별도로 모집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시청자들은 SNL코리아를 쇼츠와 틱톡 등 짧은 클립으로 소화할까?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에 중독되고 있고, 집중력은 도둑맞고 있다. 최근 발간된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에 따르면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하며 직장인의 평균 집중 시간은 3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한국이라고 다르진 않을 것이다. 일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영화 흥행 톱 10의 평균 러닝타임은 129분에서 114분으로 10% 넘게 짧아졌다.

OTT 시청 패턴도 바뀌고 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크릿 인베이전>을 유튜브에 검색하면 매 회차의 내용이 요약된 수많은 콘텐츠가 나온다. 조회 수도 적지 않다. 올 상반기에 크게 흥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도 마찬가지다. 각 회차 요약은



유튜브 쇼츠로 업로드된 SNL코리아 하이라이트의 한 장면. ©@CoupangPlay

물론 복선과 명대사 하이라이트들이 시리즈별로 올라와 있다. 틱톡은 더 극적이다. 콘텐츠별로 주요 구간을 잘라서 올려놓은 계정이 수두룩하다. 저작권의 문제는 차치하고 보면, 사용자들이 OTT 바깥에서 60초 내외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OTT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면 꽤 의미심장한 현상이다. OTT콘텐츠는 기존 지상파 드라마의 특징을 문제로 산정한, 일종의 '해결책'이었다. 자극적인 소재, 짧은 러닝타임, 압축적인 콘텐츠 연출과 빠른 전개 그리고 단숨에 이어 볼 수 있는 전체 공개 등이 그 특성이다. 그런데 그 콘텐츠마저 배속으로 본다거나, 더욱 압축한 요약본으로 본다는 것이니 시청자들의 인내심은 이제 최대 60초라고 해도 무방하다.

예전엔 롱폼·숏폼 콘텐츠의 구분이 있었는데, 이젠 롱폼 콘텐츠를 숏폼으로 소비하는 새로운 현상이 일종의 기본값이 된 셈. 처음부터 끝까지 볼 사람들은 앞으로도 더 적어질 것이며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그럴싸하게 말할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한두 컷을 재밌게 소비할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결국 창작자들은 그들을 수요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롱폼을 60초 내외 숏폼으로 소비하는 세상에 창작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모든 콘텐츠를 60초로 만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60초로 소비될 수 있는 시퀀스는 필요하다. 즉 60초로 소비돼야만 본편이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콘텐츠 안에 밈으로 소비될 수 있는 컷을 만든다면 예비 시청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SNL코리아와 최근 '남편사망정식'이라는 밈으로 화제가 된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이 그 예다.

'하이라이트'의 사전적 정의는 가장 중요하거나 흥미 있는 장면이다. 전체와 부분이 존재하던 시기엔 본편이 본이고, 하이라이트가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60초 하이라이트가 흥행해야 전체 회차가 존재할 수 있는 시대다. 시청자의 변화한 패턴을 역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본말이 전도된 새로운 뉴노멀 시청 패턴에 모두가 적응해야 한다.



구현모
미디어 뉴스레터 '어거스트' 에디터
augustletter08@gmail.com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극장 밖'에 있는 관객을 불러오려면

"사람들은 극장 밖에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서 언급된 문장이다. 그간 영화는 '극장'이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팬데믹 이전부터 극장산업 성장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영화 <기생충>이 칸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동시에 최고상을 받는 등 한국영화에 대한 대중적·예술적 위상이 최정점에 달했고, 한국영화는 마치 최정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모든 걸 불태우는 듯했다.

글로벌 OTT플랫폼들은 팬데믹을 기회로 삼아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장산업의 위축은 OTT 플랫폼의 사업 방향과 맞닿아 많은 영화 인력이 OTT로 이동하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양질의 OTT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왔다.

엔데믹으로 진입한 지난해 한국 극장가는 어땠을까. 2022년 한 해, 극장산업의 불황 속에서도 '천만 관객' 영화가 두 편(<범죄도시2>, <아바타: 물의 길>)이나 나왔다는 사실은 극장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한껏 키웠고, 볼 영화만 있다면 관객은 언제든 다시 극장을 찾을 거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플랫폼의 다변화로 관객의 선별적 영화관람 성향이 강해지고 작품에 대한 관객의 기대치가 변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도 됐다. 게다가 높아진 관람 요금은 사람들에게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했다. 이에 극장은 '체험'과 '경험'에 더욱 방점을 찍으며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국가적 경계를 허물어버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여러 나라가 디지털미디어산업과 이를 둘러싼 규제와 지원정책 그리고 미디어 환경 경험에 걸친 소비자의 변화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많은 분석과 연구를 내놨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OTT산업의 등장과 확장이 기존의 콘텐츠 배급 또는 가치사슬 구조 변화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각국의 기존 미디어 환경과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변화와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OTT서비스의 성장으로 기존의 방송 규제체계의 재편과 미디어 거버넌스 및 법제 개편 필요성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OTT가 영비법 체계 속에서 제도화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OTT 관련 핵심 제도인 '영상물 등급 분류'와 세액공제를 위한 법제에서 영비법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향후 영상 관련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서 영비법 체계의 정비와 확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비법에 근거해 극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정책을 수립해 온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적 역할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 ©연합뉴스

현행 영비법은 2006년에 제정돼 몇 차례 개정되기는 했으나,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과 법제도 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될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비디오산업을 독자적인 영상산업이라기보다는 영화산업의 가치사슬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영화'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규정해 유통방식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개념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체계의 방향성 모색을 위해 영화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성장하는 OTT산업과 함께 영화의 외연을 확장하고 경계를 뛰어넘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영화의 개념을 제시할 현실적 방안이 필요한 때다.



손진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팀장
ginason@kofic.or.kr

“선택과 집중 통해 해외진출 가속할 때… K플랫폼 경쟁력 확보 위한 지원 동반되길”

노동환 콘텐츠웨이브(Wavve) 정책협력 리더

2019년 SK텔레콤의 oksusu, KBS·MBC·SBS의 POOQ 두 개의 OTT서비스가 통합돼 탄생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 이들의 목표는 슬로건 ‘JUST DIVE, Wavve’처럼 이용자들이 콘텐츠 파도에 풍덩 빠질 수 있도록 깊고 풍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K콘텐츠 전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웨이브의 전략과 비전 그리고 OTT시장의 현주소와 산업 전망에 대해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 리더에게 물어봤다.

OTT플랫폼 가운데 웨이브만이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

대중성과 차별성을 결합해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국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주요 케이블사 등의 가장 대중적인 콘텐츠를 매일 100개 이상 업데이트하는 등 방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HBO, NBC유니버설, CBS 등 해외스튜디오와의 협력으로 대작 시리즈, 영화 등을 독점 제공한다. 다른 플랫폼이나 제작사들이 다루지 않는 소재를 담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도 확보해 자회사 스튜디오웨이브에서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츠로 기획·제작해 유통하고 있다.

최근 OTT시장 동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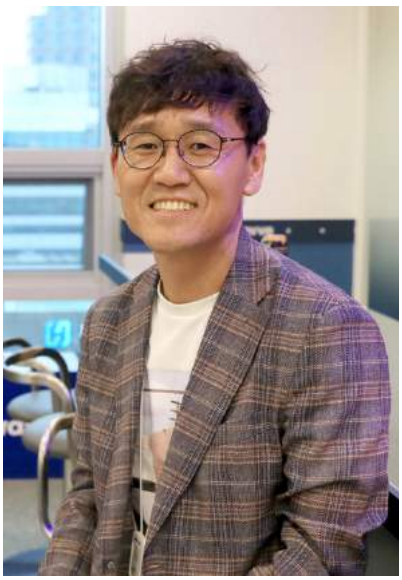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글로벌 플랫폼들이 OTT시장을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고, 모두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기존 SVOD서비스(구독형 OTT)가 광고형 모델과 결합하거나, 스마트TV를 중심으로 광고 시청 후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는 FAST채널을 활용하는 추세다. 국내 OTT플랫폼들은 아직 해외진출 초기 단계지만, K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우리 미디어산업도 주목받고 있어 K-OTT서비스 선호도와 인지도도 곧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OTT플랫폼들이 적자 운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한정된 내수시장과 수익성, 공격적 콘텐츠 투자에 따른 적자는 예견된 일이다. 산업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기보다는 한 번은 겪어야 할 고통의 시기를 지나는 것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젠 과도한 비용경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내 플랫폼들은 턴어라운드를 위해 해외진출을 가속할 것이고 콘텐츠 투자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웨이브도 해외진출 본격화에 나서나?

구독경제 모델인 OTT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미주지역 OTT플랫폼 코코와를 인수해 해외구독자 확보에 나섰다. 코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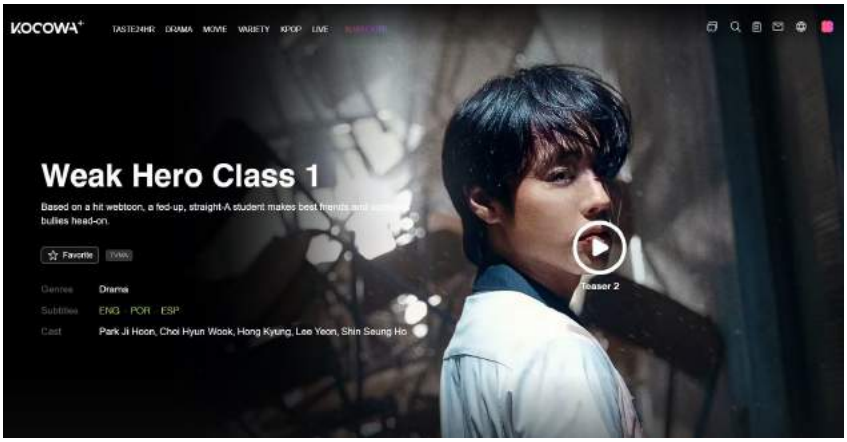


를 통해 미국, 브라질, 멕시코 등 30여 개국에 국내 방송콘텐츠와 오리지널 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 중이다. 미주지역을 시작으로 중동·아프리카, 동남아 등으로 진출지를 확장해 K콘텐츠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투자 사업 등 협력도 확대해 ‘K콘텐츠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광고결합 상품처럼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도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

외부와는 어떤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웨이브의 오리지널 콘텐츠 유통을 위해 해외 미디어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의 경우 일본 OTT플랫폼 레미노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 미주지역에서 동시에 공개했다. 한편 영역

을 확대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현대차그룹, 티맵모빌리티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커넥티드 카에 차량용 OTT서비스를 탑재했고, LG전자 2023년형 스마트TV 리모컨에 웨이브 핫키(바로가기 버튼)를 탑재하는 등 이용자와의 접점을 높이고 있다.



웨이브는 미주지역 OTT플랫폼 코코와를 통해 30여 개국에 K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 사진은 코코와에 등록된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약한영웅 Class 1> 소개 및 티저 화면. ©Wavve

콘텐츠 제작·공급 외에 서비스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OTT처럼 동영상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플랫폼은 기술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AI, 기계번역, 미디어 현지화 전문기업 등 다양한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어체 방송콘텐츠용 자동 자막 제작·편집 기술을 개발 중이다. 올해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해 내년까지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콘텐츠의 실시간 현지화가 가능한 주문형비디오(VOD) 시범서비스를 구축하고, 콘텐츠 전용 한국어 음성인식기, 장르별 문맥 기반 기계번역기, 클라우드 자막 편집도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OTT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OTT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조항에 OTT 정의가 마련돼 세제지원,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근거가 생겼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의의가 크다. 한편 과거엔 오리지널 콘텐츠나 독점권을 딴 해외시리즈를 유통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했다. 유통되기까지 2~3주 정도 소요되다 보니 사업자는 지연에 따른 금전 손실을 보고, 이용자는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제는 '자체 등급 분류제'가 시행돼 작품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됐고, 방송사 및 제작사와 협업해 제작하는 콘텐츠의 경우 차별화된 버전을 동시에 선보이는 것도 가능해졌다.

해외에서는 플랫폼에 어떤 지원 혹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나?

국가별 특수성에 맞게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OTT시장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중시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일부 유럽지역은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미디어산업을 보호하고자 기금 부과, 콘텐츠 편성 쿼터제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국내 OTT플랫폼에 대한 지원과 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책적으로 바라는 점은?

최근 OTT 관련 현안들은 글로벌 플랫폼이 야기한 시장구조 변화에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 정책적으로 OTT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동시에 플랫폼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 영역에서는 OTT에 대한 새로운 법적지위 부여 및 기금 징수, 저작자의 추가 보상권 보장 등이 이슈고, 콘텐츠 거래시장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자본 의존화와 IP 판권 독점 문제 등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지원 예산 규모 확대와 규제장벽이 높아 진출이 어려운 국가에 국내 플랫폼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OTT를 둘러싼 미디어시장을 전망한다면.

국내외 사업자 간 제휴, 경쟁 사업자들 간의 전략적 협력, 다양한 장르와 서비스를 묶는 구독서비스 등 여러 영역에서 연결과 협업이 등장할 것이다. OTT플랫폼 확산에 따라 시각특수효과(VFX) 등 콘텐츠와 연관된 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시장이 창출될 것이고, 미디어 분야에서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용자 성향 분석, 딥러닝 추천시스템, 사업 및 마케팅 활용 등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디어산업에서 데이터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정아 『나라경제』 기자

광고 규제 등으로 불법사이트 수익원 차단해 저작물 불법복제와 서버 유통 근절해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0년 전에도 드라마, 예능 등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해 무료로 스트리밍하는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렸었다. 이제 OTT가 미디어콘텐츠 유통·소비에서 주도적인 플랫폼이 되자, 여러 OTT플랫폼의 콘텐츠를 한데 모아 스트리밍하는 사이트들이 등장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사이트들은 말할 나위도 없이 모두 불법이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복제된 저작물을 인터넷 서버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2021년 대법원은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용해 스트리밍하는 행위 역시 '링크 행위자가 불법복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도 그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해,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올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누누티비'가 미디어 업계에 가져온 피해 추산액은 무려 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미디어 업계만의 피해로 그치는 일이 아니다.

창작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의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양질의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창작자의 창작 유인이 사라지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콘텐츠산업도 붕괴하고 만다. 이용자도 더 이상 양질의 콘텐츠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우선,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에게 예외 없이 신속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자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작권자나 수사기관이 그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해외서버 운영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불법스트리밍 사이트의 수익원을 차단하는 일이다.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이용자들을 그러모은 다음, 그 트래픽을 근거로 광고주나 광고플랫폼으로부터 배너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내고 있다. 따라서 광고주나 광고플랫폼이 불법스트리밍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한다면 해당 사이트는 수익원을 잃게 돼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제공조 강화나 광고주 등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의 조치들은 즉각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특히 광고주 등이 광고가 게재되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유통되는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등의 여부를 매번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규제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 개선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 OTT사업자도 콘텐츠를 독점 공급해 가입자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OTT 간의 장벽 없이 여러 콘텐츠를 저렴하게 향유하고 싶어 하는 이용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고민하고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용자가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를 찾는 유인도 대폭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김우균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
wgkim@shinkim.com

‘콘텐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전략과 시장 조력자로서의 정부 정책 필요한 때

요즘 미디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접하다 보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거나 제작된 국내 콘텐츠의 성공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셀러브리티> 등이 그 예다. K콘텐츠의 성공은 글로벌 OTT플랫폼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디어산업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료 OTT플랫폼 중 하나는 넷플릭스와 같은 ‘SVOD서비스(구독형 OTT)’다. 글로벌 SVOD시장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약 8.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시장도 같은 기간 동안 약 10.1% 성장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은 시장 성장과 함께 글로벌 SVOD시장에서의 경쟁이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간 미국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이용자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점유율 21%로 넷플릭스를 추월하면서 1위를 차지하게 됐고, 올 2분기까지 이용자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올 2분기에 디스커버리플러스와 결합한 HBO 맥스는 디즈니플러스를 앞서고 있다.

이러한 경쟁 심화는 넷플릭스가 지난해 광고를 포함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고 계정 공유를 유료화하는 등의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는 계기가 됐다. 동시에 각 OTT사업자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해 대규모 콘텐츠 투자를 실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은 기존 방송산업의 플랫폼·제작·광고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이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기존 국내 방송산업의 광고 매출 하락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규모의 경제에서 열위에 있는 국내 미디어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 측면에서도 대규모 글로벌 미디어플랫폼과의 경쟁은 향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3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시장인 ‘제17회 부산콘텐츠마켓’을 찾은 참가자들이 문화콘텐츠 제작사 부스에서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국내 플랫폼은 어떻게 경쟁해야 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콘텐츠 규모의 경제’ 실현이다. 넷플릭스처럼 직접적으로 해외진출을 고려하거나 해외 또는 국내 다른 플랫폼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접적 해외진출 방식이 성공하려면 현지화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해외 로컬사업자와의 제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해외에서 FAST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기업들과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의 융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국내 미디어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인수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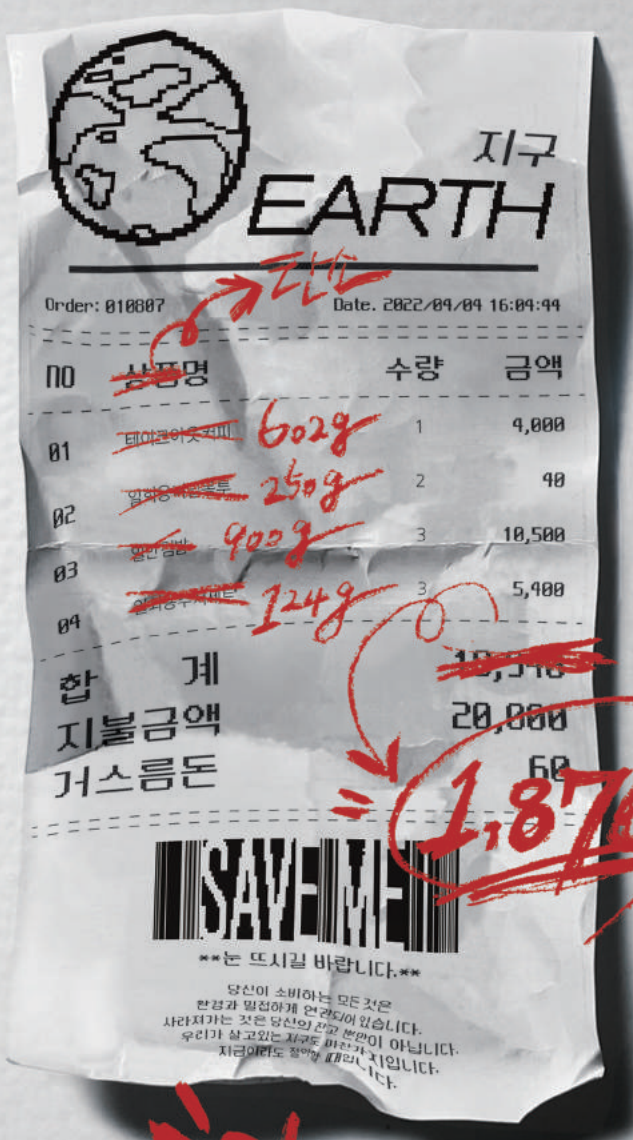
다른 한 축으로, 정부는 국내 플랫폼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의 열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의 조력자’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세액공제나 국내 OTT플랫폼과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디지털 미디어 관련 펀드 조성, 이종 산업·기술 측면에서의 융합을 촉진하는 정책 발굴 등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의 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swlee2668@khu.ac.kr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나는 오늘도 지구를 낭비했다.

1인당 탄소 발생률 하루 평균 7.18kg. 1년이면 26t입니다.
소비량만 줄여도 지구는 되살아납니다. 무의식적으로 매일 해왔던 작은 소비, 이젠 줄여야 할 때입니다.

연중기획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서울·수도권에 살고 있고, 상당수의 지방은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각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

지역에서 '재미'있게!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관광대체 소비규모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국민 1인당 지역 안(기초지자체 기준) 소비액은 평균 744만5천 원, 지역 밖 소비액은 평균 893만6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가능성을 가늠케 한다.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 여덟 번째 키워드는 '관광'이다.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알아보고, 지자체와 민간 차원의 노력들을 들여다봤다. 지역에서의 '재미'있는 경험들이 쌓이며 마을의 활력이, 지속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



경남 양산시
통도사 서운암의
'천연염색축제'

주민들의 삶 담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기대



지난 3월 11일 충남 논산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린 논산딸기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딸기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몇 해 전부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의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관광' 활성화 대책을 고심 중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감소지역 정주인구 1명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를 관광객 약 41명이 대체할 수 있다. 즉 관광을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강원도 양양군이나 고성군 등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개발이 이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더 많은 관광객이 더 자주 방문하고, 더 많은 소비를 할수록 관광의 효과는 커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선,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 자주 더 오래 지역에 방문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관광 부문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이루기 어렵다.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부터 항공·교통 그리고 다양한 농촌·해양·산림·문화재와 같은 자원 등에 이르기까지 범부처적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관광기업뿐 아니라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함께해 혁신적인 관광콘텐츠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숨겨진 면모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관광객에게 새로운 지역 매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행경험이 누적되면서 더 새로운 장소와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상당수 지역에서 출렁다리나 케이블카 개통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신규 관광시설의 조성은 일시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다. 물론 시설에 매력적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입힌 경우 지역 대표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상당수 시설이 초기에만 반짝인기를 누린 이후 관광객들에게 서서히 외면받는 사례를 목격해 왔다.

천편일률적인 시설 조성보다 지역이 가진 강점을 찾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자원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에서 지역 색을 살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관광의 다양성과 특색, 독보적 매력은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 활동가의 기획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주민들이 살아온 삶과 환경, 이야기 등을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광기획자를 양성하고 창조적 관광상품과 일자리를 만들어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강조하고 싶다. 자칫 관광객 숫자에 집중할 수 있는데, 10명의 관광객이더라도 '더 자주' 방문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한다면, 1천 명 이상의 파급효과를 낼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일명 '오버투어리즘'이라 불리는, 지역의 관광수용력을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에서 나아가 관광으로 인한 편익이 지역에 골고루 순환되고,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마다 차별화된 관광경쟁력을 갖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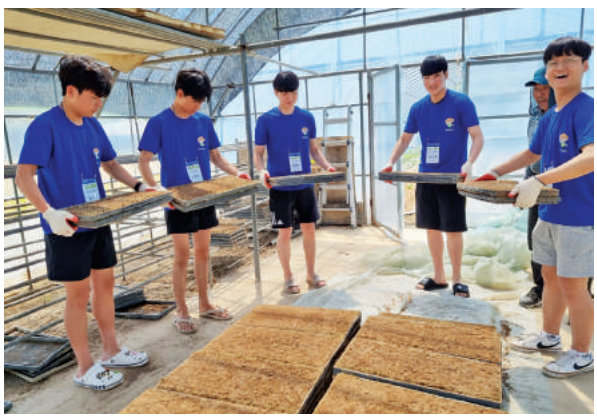
박주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jypark@kcti.re.kr

정(情)을 주고 사람을 얻는 강진 '푸소(FU-SO)'

전남 강진군에서 가장 성공한 관광정책을 꼽으라면 단연 '푸소(FU-SO)'다. 봄, 가을이면 푸소체험을 하러 온 학생들로 북적인다. 휴가철에는 직장인들이 푸소 운영농가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삶의 여유와 위로를 얻는다. 푸소는 어느새 강진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가 됐다.

푸소는 농촌집에서 하룻밤 머물며 함께 정을 나누고 농촌의 삶을 경험하는 생활관광 프로그램이다. 'Feeling-Up, Stress-Off'의 앞 글자를 따 이름을 붙였다. 감성을 채우고 스트레스는 비운다는 뜻이다. '덜어내시오'라는 의미를 가진 전라도 말로 강진에 와서 '몸 푸소, 마음 푸소'라고 쓰기도 한다.

숙박시설이 부족해 스쳐 지나가는 여행지에만 머물러 있었던 강진군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마음에서 시작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볼거리에도 강진은 잠시 들렀다 가는 여행지에 지나지 않았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강진군이 있는 그대로의 것을 활용하면서 소득은 지역주민에게 오롯이 환원되도록 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 결과 푸소가 탄생했다.



푸소 프로그램에 참여해 농촌체험을 하는 학생들. ©강진군청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아이들이 단 하룻밤이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위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따뜻한 마음도 녹아 있었다. '정(情)을 주고 사람을 얻는' 강진군의 장기적 전략이었다. 이런 이유로 푸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에서 출발했다.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함께 저녁 밥상을 준비한다. 주인장과 빛나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한다. 건강한 식재료로 차려낸 아침을 먹고, 감자 캐기, 옥수수 수확, 염소젖 짜기, 낙지 잡기 등 각 농가 저마다의 특징이 담긴 농촌체험을 진행한다. 체험객들은 농촌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감성, 넉넉한 인심을 경험한다. 자녀들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적적했던 노부부가 손주 같은 아이들과 정을 나누며 노년의 즐거움을 찾는다.

2015년 5월 첫 문을 연 푸소체험에는 올해 6월까지 5만3천 명이 참여했다. 기간 중 푸소 운영농가의 직접 수익은 44억 원에 이른다. 유료 관광지 방문, 지역 식당 이용, 농특산물 구입 등까지 고려하면 지역 전체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소득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머물다 가는 '생활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역민과 정을 나누며 강진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재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로 9년 차에 접어든 푸소는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인구소멸 위기 대응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이제 푸소 시즌2가 문을 연다.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은퇴자들과 귀농인들을 맞이하려 한다. 강진군에 정착하는 '정주인구'를 늘리고, 이들이 푸소체험 운영자로 합류해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연령층의 체험객을 유치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농가의 시설을 정비하고 푸소체험 운영자들이 관광 전문가가 되도록 역량 강화 교육도 보강한다.

생활관광이 대중화되기 이전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시작했던 푸소는 지역을 살리겠다는 행정 당국과 지역민의 열망으로 완성됐다.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채워가듯 만들어낸 '메이드 인 강진' 푸소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국가대표 관광상품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마혜선
전남 강진군청 푸소팀장
mayang07@korea.kr

"마을이 여행지가 되면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지속 가능해진다"

조문환 놀루와협동조합 대표



"놀루와라 써 놓고 마을한다라 읽는다." 경남 하동의 주민공정여행사 '놀루와협동조합'(이하 놀루와)의 슬로건이다. 하동군 악양면장을 지냈던 조문환 놀루와 대표는 지역의 문제를 푸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정년을 7년 앞둔 2017년 공직을 떠나 2018년 8명의 조합원과 함께 놀루와를 설립했다. 지역, 주민, 공동체를 향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는 놀루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차마실, 섬진강 달마중 등 지역색 살린 프로그램 선보여… 그 바탕은 지역민과의 긴밀한 협력

놀루와는 여행사이기는 하지만 비즈니스보다는 '지역'에 방점을 두고 있다. "마을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여행상품을 잘 만드는 건 뒤의 문제다."라는 조 대표의 말처럼 여행사는 농촌이 갖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 놀루와가 선택한 방식일 뿐이다.

여행이라고 하면 대부분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나 다가가고 싶고, 접근하기 쉽고, 또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아 지역에서 풀어내기 좋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놀루와에는 농촌관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순 체험프로그램이 없다. 지역 자원인 차와 예술을 결합한 '차마실', 섬진강 야행에 공연 등을 결합한 '섬진강 달마중'처럼 생태·마을에 문화예술을 융합하고, 교육과 여행, 문화기획이 합쳐져 여행이 교육이 되고 또 교육이 여행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조문환 대표는 경남 하동이 여행사가 자리 잡기 딱 맞는 곳이라고 말한다. 생태적으로 전국에서 드물게 산, 강, 바다가 모두 있고, 섬진강변에는 귀촌 예술인들이 많다. 덕분에 생태자원을 문화와 융합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여행상품이 소나무 투어다. 마을에 문암송, 부부송, 십일천송이라는 이름이 붙은 소나무 세 그루가 2~4km 정도 떨어져 자리 잡고 있는데 각 소나무가 가진 스토리, 조형미에 문화예술 요소를 더해 하나의 테마상품으로 만들어냈다.

"소나무를 각각 점이라 보고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을 선으로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 대표가 소나무 투어를 소개하며 언급한 점과 선 개념은 놀루와의 협업모델을 상징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조합원들이 점을 찍고, 그다음에 협력업체 등이 생겨나 선으로 이어지며 면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현재 놀루와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조합원, 협약·협력 업체는 38곳이다.

하동 차 문화의 매력을 살린 여행상품 '차마실'은 이를 잘 설명하는 모델이다. SNS에서 인기를 끌며 젊은 세대가 많이 찾은 차마실은 차와 다기, 다식이 포함된 차 시음 세트를 빌려 지역의 다원에서 차를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비로 2만 원을 받는데, 1만4천 원은 농가가, 6천 원은 놀루와가 얻는 구조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운영 방식. 놀루와는 차를 잘 알고 문화와 예술을 아는 농가를 모아 민간여행플랫폼 '다포' 결성을 주도했다. 여행상품의 기획과 사무는 놀루와가 맡고, 10여 개의 다포 농가가 여행객을 맞이하면서 차밭을 가이드하고 차를 해설하는 등 현장에서 운영자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과의 긴밀한 협

력을 지향하며 여행자를 위해 지역이 협업하는, 놀루와만의 방식이다.

지난 5월에는 악양면 매계마을에 '호텔 매계'를 열어 그 모델을 확장했다. 67가구 117명이 살고 있는 매계마을은 지난 10년간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여행자가 찾아오는 마을로 거듭났다. "이 마을의 장점은 소소한 것부터 시도해 차근차근 밟아왔다는 것이다. 버려진 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마을 커뮤니티센터로 만들고, 북카페,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소득자원이 없고, 핵심 콘텐츠 부재로 단순 방문에 그치는 점이 아쉬웠다. 또 고령화로 10년 후가 염려되는 마을이었다. 조문환 대표는 이 마을이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마을 전체가 호텔이 되는 마을호텔 사업을 제안했다. "협동조합 매계라는 단체를 설립해 호텔 매계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을요양원을 만드는 것이 이 마을의 꿈이다."

호텔 매계는 놀루와가 직영하지 않고 마을과 협업하는 방식을 취한다. 빈방이 있는 가정은 호텔 방을 운영하고, 그 외의 주민들은 식당, 빨래방, 공방 등을 운영하거나 마을의 미술관에서 해설사 역할을 하며 분업하는 형태다. 예약 및 사무 업무는 놀루와가 맡는다. 아직은 5농가 10실 정도 규모이고 예약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 나가지 않고 마을이 준비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갈 계획이다.

마을에 애정 갖고 깊이 들여다보며 지역 자원과 연결할 수 있어야

보통의 민간여행사와 달리 놀루와는 '주민공정여행사'를 표방한다. "주민여행사와 공정여행사는 엄격하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나는 이 둘이 같다고 본다. 주민이 하면 당연히 공정여행사가 될 것이고, 지역도 혜택을 입고, 여행자에게도 만족을 주게 된다."라고 조 대표는 설명한다.

놀루와를 통해 하동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1년에 3천 명 남짓. 그중 2천여 명 정도가 마을활성화, 농촌관광, 공정여행을 배우기 위해 오는 답사팀이다. 이들은 동네의 자원을 어떻게 여행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놀루와를 찾는다. 조 대표는 "마을의 시스템은 배워갈 수 있지만 공정여행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자원은 있는데 사람이 없을 수 있고, 사람은 있는데 자원이 없을 수도 있다. 또 사람이 있다 해도 마을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며 지역 자원과 연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다. 마을에 애정이 없으면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것은 활동가라는 조문환 대표. "지역에 워낙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무언가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활동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동군의 지원을 받아 3년간 활동가를 교육하고, 마을과 매칭해 컨설팅하는 활동가대학 사업도 하고 있다."





놀루와가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 포스터들.

지난 2021년 놀루와는 관광 분야에서 가장 큰 상인 '관광의 별'을 수상했다. 주로 대규모 관광단지나 지자체가 받아온 상인데, 지역 민간단체로는 놀루와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103회 진행된 섬진강 달마중은 2020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100선'에 오르기도 했다. "공공은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기 어려운데, 우리는 6년 동안 하나의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 지금과 같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조 대표.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협의체 사업을 맡아 놀루와를 구심점으로 주민들이 직접 야간관광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기획하는 관광협의체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조 대표의 꿈은 마을에 '뚜벅이' 여행자가 스멀스멀 들어와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놀고, 동네 카페도 들여다보고, 그러다 책방도 생기고 민박집도 생겨나며 주민의 쉼터가 여행지로 변모하는 것. 그것은 단지 물리적 인프라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화와 예술이 적절히 조합된 형태다. 그렇게 마을이 여행지가 되면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마을은 지속 가능해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홍성아 『나라경제』 기자

프랑스, 엄격한 기준으로 4만여 개 농촌관광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프랑스 남동부 오베르뉴 론 알프 지역 비코크 농장의 트리하우스에 방문한 가족들의 모습. ©Focus Outdoor(프랑스 관광청 제공)

프랑스는 전후 본격화된 농업 근대화 과정에서 이농현상이 심화하자, 농촌지역의 침체를 극복하고 농촌의 자산을 보존·활성화하기 위해 농촌관광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구 유출로 위기에 빠진 지역의 대안적 운동으로 일어난 지뜨 드 프랑스(Gîtes de France) 운동은 농촌지역 은퇴자 중심으로 일어난, 전통 농촌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한 민간운동에서 시작됐다.

'바캉스용 시골집'이라는 뜻의 지뜨(Gîtes)는 1951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에밀 오베르에 의해 설립되고 1952년 제2차 국토개발계획 관광 부문 근대화를 위한 정부 보고서에서 관광시설로 공식화됐다. 전국적으로 생성된 146개 지뜨를 연결하기 위해 1955년 전국지뜨연합회가 창설됐고, 이후 단순한 농촌숙박시설을 넘어 어린이 지뜨, 낚시 지뜨, 장애인 지뜨, 승마 체류 등 다양한 농촌관광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된다. 전국지뜨연합회는 1997년 관광부로부터 공식 관광시설 감독기관으로 승인받고 웹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현재 프랑스에는 전국적으로 4만여 개의 지뜨가 있다.

농촌주택을 개량·보수해 주로 숙박 위주의 임대사업을 하는 지뜨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인된 전국지뜨연합회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받고 있다. 지뜨연합회 가입 후 70여 개 항목에 달하는 심사기준에 합격하면 '지뜨 드 프랑스 라벨'을 획득할 수 있는데, 라벨을 부착한 농가는 4~5년에 한 번씩 서비스, 내부시설, 안전관리, 위생 문제, 실내 및 외관 경관 상태, 체험 프로그램 등 엄격한 품질관리 점검을 받게 된다. 6개 상품 유형별 그리고 테마별로 품질관리 규약을 두고 있고, 이삭 개수로 각 지뜨 시설의 등급을 나눠 관리하고 있다. 테마 지뜨는 체험관광이 부각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장애인, 승마, 낚시 등 특수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뜨에 대한 설비규정이 포함된 것이다.

예컨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지뜨는 화장실, 목욕탕, 냉장고 등 기본적인 시설에 별도 정원 등 추가 시설과 식기세척기, 세탁물 건조기와 같은 가전제품 등이 제공될 경우 이삭이 1개 등급에서 4개 등급까지 상향 적용된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시설을 갖춘 어린이 지뜨는 아동 최대 수용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소 규모인 경우 자연과 동물을 체험할 수 있는 농장에 미니 지뜨를 구성할 수 있고, 최대 규모인 경우 방학프로그램으로 연극, 도자기 등 문화예술체험 및 수영, 스키 등 체육활동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활동별로 필요한 전문교사 요건도 포함하는 등 상품별로 매우 상세한 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국내 가족 단위 농촌체험마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시설의 위생·청결 상태가 농촌체험시설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며, 화장실·샤워실 편리, 숙박시설 예약 편의성 등도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활성화에 숙박시설의 품질 및 서비스 관리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현지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산어촌 관광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농산어촌 관광상품은 개별 상품으로 판촉돼 전체 숙박시설에 대한 통합예약시스템 등이 부재하고 관광상품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관리 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어촌 숙박시설에 대한 품질관리 등 체험객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프랑스 지뜨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sy2@krila.re.kr

그리스가 로마에게, 로마가 그리스에게

2023.6.15. — 2027.5.30.



SEPARATE
BUT INSEPARABLE:

MYTHOLOGY AND
CULTURE OF ANCIENT
GREECE AND ROME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고대 그리스·로마실

Ancient Greece and Rome Gallery
Permanent Exhibition Hall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KUNST
HISTORISCHES
MUSEUM
WIEN

해외인증 국내 취득 더 쉬워진다!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인증'은 자국민의 안전·보건·환경 등을 지키기 위해 검증받은 제품에 한해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해외인증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고자 할 때 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비자를 취득해야만 현지에 입국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인증제도가 각 국가별로 운영되는 데다 제품별·목적별로도 달라 그동안 정부에서 우리 기업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인증만도 53개국 583개에 이를 정도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 스피커를 수출할 때, 안전 분야로만 국한해도 미국 NRTL, EU CE-LVD, 중국 CCC, 일본 PSE 등의 해당 국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자파, 무선, 유해물질(RoHS) 등과 관련해 별도의 시험·인증이 또 필요하다.

지난해 코트라에 접수된 수출기업 상담 중 해외인증 관련 내용이 두 번째로 많았다는 것은 기업들이 해외인증 취득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 단계별 정보 부족, 전문인력 수급 애로, 인증 과정 중 기술적 대응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국 우선주의 무역기조에 따라 인증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출역량을 보유한 대기업들조차 해외인증과 관련된 내용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해외인증 취득의 걸림돌이 해소된다면, 개별 기업의 수출 확대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수출플러스 달성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정부는 비용지원 중심으로 해외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기업 애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쉽게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해외인증 역량을 강화하기 위

국내기관의 인증을 해외기관이 인정하는 해외인증 상호인정 품목을 연내 49개국 171개 품목으로 확대

수출 유관기관과 전국 순회하며 해외인증 설명회 개최하고 지자체 등 행사 현장에 애로 상담부스 운영해 현장 컨설팅 제공

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범부처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지난 5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확정하고 6월 29일 최종 발표했다.

코트라 등에 흩어진 해외인증 정보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

우선, 기업들이 해외인증을 국내에서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상호인정은 국내외 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기관의 시험·평가·심사·인증 결과를 해외기관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5개국 141개 품목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을 올해 49개국 171개 품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인증 취득 난도가 높거나 국내 민간시험기관이 지원하기 힘든 융복합 신기술 분야 등 수출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분야의 경우에는 해외 시험인증기관에서 4개월 이상, 약 1억 원 이상이 소요됐던 것을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2개월 만에 약 3천만 원의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세계 권역별로 해외인증 취득의 지원 기반을 확대해 나가

기 위해 각 권역별로 특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북미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기관과 인증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럽의 경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규제, 의료기기 규제(MDR) 등 강화되는 인증제도에 따라 국내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평가·승인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현지 의료기기 인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합작법인 설립 등이 추진된다.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 간 시험인증 상호인정 수용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인증 심사원의 상호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인증 취득 과정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새로운 전략 수출시장인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는 우리 인증기관이 국내에서 직접 해당 국가의 인증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우리 기업에 해외인증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인증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코트라, 시험인증기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에 산재해 있는 해외인증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export.k-onestop.kr)을 구축해 기업들이 해외인증 관련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기업들의 상담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심층정보를 포함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품목별 전문 상담사를 발굴한다. 정보가 부족한 신시장·신제품 인증에 대해서는 해외무역관 등과 협업해 신속한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해외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 기업이 규제 준비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knowtbt.kr)와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해 산업계에 전파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부담이 되는 기술규제는 WTO·FTA TBT 위원회, 통상장관회의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대응하고, 필요시 TBT 대응반을 파견해 규제 완화, 시행 유예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수출 인증을 포함한 복합 애로 겪는 기업에 맞춤형 자문 제공… 국내 해외인증 지원 역량 통합하는 네트워크 구축·관리

셋째, 수출기업이 현장애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맞춤형 자문, 인력양성 등도 대폭 강화한다. 기업이 정보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유관기관 등 기업 접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과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 유관기관, 지자체, 경제단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포럼, 간담회 등 현장에서 애로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현장 컨설팅도 제공한다.

수출이 임박했거나, 수출 인증을 포함한 복합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코트라 등과 협업해 수출까지 성과가 이어지도록 맞춤형 자문도 제공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에는 단기 역량강화 교육 등 정보 및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표준·적합성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과 협력해 수출·해외인증 특화 청년인력도 양성한다.

기업들의 기술개발이 인증 취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로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인증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겪지 않도록 개발 단계부터 국내외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이뤄질 수 있게 돕는다.

마지막으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의 원활한 이행과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기업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해외인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부터 이미 '해외인증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후 지난 13개월간 지원단은 17건의 설명회 진행, 6개 상담부스 운영,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59개 지원사업을 총망라한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 수출현장에 정보 제공과 애로 해소를 활발하게 지원해 왔다. 유관 부처·기관의 지원 성과도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리해 나간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외인증 지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인 성과점검과 함께 해외인증과 관련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인증과 수출 마케팅의 연계를 위해 시험인증기관과 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의 역량 활용을 위한 글로벌 인증 전문기관 협의체를 통해 국내 민관에 흩어져 있는 해외인증 지원 역량을 통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관리한다. 각 부처와 기관의 지원창구로 접수된 애로는 지원단이 수집하고, 개별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애로는 지원단을 통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해소하며, 중장기 정책적 애로의 경우 해외인증 정책협의회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민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팀장
minholee@korea.kr

클러스터 중심의 지원체계 기반으로 유망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년)

글로벌 경제질서에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비롯한 녹색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전례 없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전 세계 녹색산업은 지난해 기준 1조3천억 달러(약 1,70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로 인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녹색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분야별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및 유가금속 회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에너지는 2009년 전 세계 전력공급의 0.1%에 불과했지만 2050년에는 24.3%로 380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역시 주목받고 있다. 전기차시장의 성장과 함께 배터리와 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연평균 7.6% 성장 중이다. 더불어 AI·ICT 분야에서도 녹색산업과 결합한 녹색창업 기업이 확대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클러스터, 녹색산업 융합 플랫폼 및 기술 실증 허브 역할 수행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창업부터 해외진출·융자·투자 등 녹색산업의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포함한 4개 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추진하는 등 유망 녹색산업을 우리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30일에는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 주요 지역별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특화한 녹색산업과 녹색 연관산업의 집적화·융복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유망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클러스터 중심의 녹색산업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클러스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육성한다는 내용의 3개 분야 총 9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녹색융합클러스터가 녹색산업의 융합 플랫폼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위치한 지역에서 보유 중인 인프라(수요·공급처, 관련 기업·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와 입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우선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금융·유통·ICT 등 연관산업까지 확장·연계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실증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기업들이 기술개발 이후 새로운 시장진출 과정



지난 6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배터리 & 충전 인프라 엑스포'에서 참가 업체 관계자가 태양광을 활용한 가정용 전기 충전기 작동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소 중 하나인 실증레코드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실증처를 발굴해 기업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실증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해 왔으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실증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수혜 대상이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입주기업이 클러스터와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를 위해 핵심기업의 입주 및 관련 기업의 동반 입주를 유도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입주기업들이 정부 자금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본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시장에서 유망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실리콘밸리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지역 거점별로 조성된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성장단계별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클러스터 간 기업성장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권역별 클러스터 간 소통·협력을 통해 녹색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확장·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물순환, 순환경제 등 주요 녹색산업 분야별 업무를 총괄·지휘할 수 있는 총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간 클러스터들로 구성된 광역 협의회와 개별 클러스터별 협의회 등을 통해 입주기업과 관계기관(전문 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및 클러스터가 참여하는 현장 소통 협의회를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산업 생태계 성장 거점으로서 체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수도권 지역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분야별 녹색융합클러스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유기적 육성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환경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우수기업을 먼저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시켜 초기 창업과 성장 과정을 지원하고, 이 기업이 성장해 공장 부지, 전문 실증처 등이 필요해지는 단계에서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과정

유망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체계 구축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권역별·분야별 클러스터 간 소통협력 및 연계 강화해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뒷받침

에서 2017년부터 운영돼 입주기업 성장지원에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입주기업 인력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연합 채용행사(Job Festival)를 개최하고 선도적인 실증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총괄 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자원순환·바이오가스 녹색융합클러스터 신규 조성

마지막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녹색융합클러스터(포항), Post-플라스틱 클러스터(부산), 청정대기 클러스터(광주)의 경우 본격 운영에 앞서 기업·기관 유치방안을 모색하는 등 클러스터별 녹색혁신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토록 한다. 아울러 글로벌시장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진 탄소중립, 순환경제, 환경 AI·ICT 분야에서도 새로운 산업 생태계 거점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 대상 실태조사를 거쳐,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모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와 기존 환경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자원순환과 바이오가스 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AI·ICT 분야에서는 관련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용하는 등 환경 분야 AI·ICT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녹색산업은 새로운 시대의 산업, 즉 미래 산업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앞으로 녹색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홍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
lihong@korea.kr

세계는 지금

EU

OECD 등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에서 최근 다뤄지는 정책 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재정준칙 개혁에 나선 EU



박진호
주벨기에EU대사관겸주NATO대표부 재경관
jihpark21@mofa.go.kr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녹색·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직면한 EU에서는 현재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란 경제 분야에서 EU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제정책을 정하기 위해 수립된 제도 및 절차 시스템이다.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포함한 EU 재정 프로그램,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럽중앙은행.

EU 회원국 대부분 기존 재정준칙 개혁 필요성에 공감

이 중 EU 회원국 간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회원국의 재정건전성 및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fiscal rule)에 관한 사항이다. 재정준칙은 마스트리흐트 조약(Maastricht Treat)상 GDP 대비 재정적자 3% 및 국가채무 60% 규정(1992년),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1997년), 유럽예산회기제(European Semester)(2011년), 식스팩(six-pack)(2011년), 투팩(two-pack)(2013년)으로 구성된다. 특히 최근의 다양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준칙 적용을 일시 유예한 일반면책조항(general escape clause)이 올해 말 종료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현실적이며 집행 가능한 재정준칙 개혁은 회원국들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U는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체결 시부터 건전 재정 및 회원국 간 경제정책(재정정책 포함) 조정을 중시해 왔다. 이는 유로화라는 단일통화 정책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회원국 간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특히 최근의 전례 없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적 외부충격을 경험하면

서 현재의 재정준칙은 그 역할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더욱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재정준칙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인구 통계적 변화 측면 등에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첫째, 일부 회원국은 공공부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경제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도 재정 여력(buffers)을 확보하지 못했다. 둘째, 재정조정(fiscal adjustment)이 대부분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등 공공재정의 구성이 성장 친화적이지 못했다. 셋째, 재정준칙이 매우 복잡하며, 실제 재정준칙을 위반한 회원국들에 대한 제재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지난 4월에 부채의 지속가능성 강화, 개혁과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는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혁과 관련된 입법을 제안했다.

개별 회원국의 약정을 4년 단위 단일 중기계획으로 통합하고 중기계획 기반 재정감시 프로세스 도입 추진

EU 집행위에서 제안한 원칙은 ① 국가의 재량권(ownership) 강화, ② 간소화(simplicity), ③ 개혁 및 투자 활성화, ④ 효과적인 집행방안 확보(safeguards and enforcement) 등이다. 다만 GDP 대비 재정적자(3% 이내) 및 국가채무(60% 이내) 비율에 대한 기준값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대안이 없으며,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기존 재정준칙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회원국의 재정, 개혁 및 투자 약정을 단일 중기계획(single medium-term plan, 4년 시계)으로 통합하고, 해당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재정감시(fiscal surveillance)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단일 중기계획(집행위 제출, 이사회 승인 필요) 수립 및 활용을 통해 회원국이 책임감 있게 재정준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의 개혁 및 투자 확약에 따라 재정조정 경로 기한을 7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국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표 1> 참고).

간소화 측면에서는 재정감시의 경우 단일운용 지표인 회원국의 다년도 지출 목표(multi-year expenditure targets)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며, EU 집행위의 연례 모니터링에 대한 회원국의 부담도 완화했다. 즉 EU 집행위는 연간 재정정책 권고안을 제안하

<표 1> EU 집행위에서 제안한 재정준칙 개혁안

회원국별 조치사항

구분	조치 필요사항
기준값 충족 회원국	- 재정조정 불필요. - 재정적자 GDP의 3% 이내, 중기계획상 일반정부 부채 GDP의 60% 이내 준수.
기준값 미충족 회원국	- 회원국은 재정조정 경로(4년) 설정 필요(기존 '20분의 1 감축 규칙'은 삭제). (1) 재정적자를 GDP의 3% 미만으로 축소하거나 미만 유지. (2) 조정기간 종료 시까지 부채가 하향 추세를 보이거나 보수적인 수준에서 유지. (3) 부채는 계획이 적용되는 기간의 종료시점에 개선될 필요. (4) 재정적자가 3% 이상을 유지하는 한 최소 연간 GDP의 0.5%의 조정 필요. - 회원국은 조정을 지원하는 개혁 및 투자 약정이 있는 경우 최대 7년의 점진적인 재정조정 경로 설정 가능.

재정감시 프로세스

EU 집행위	회원국	이사회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국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출 목표를 평가	재정조정 경로와 개혁 및 공공투자 약정을 설정하는 중기 재정구조 계획 제출	집행위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계획을 승인

* 회원국은 집행위 평가를 위해 계획 이행에 대한 연간 경과보고서를 제출. 신규 프로세스는 정책조정의 중심인 유럽예산회기제에 통합.

<표 2> 재정준칙 개혁안에 대한 회원국 입장

EU 집행위 개혁안 반대 입장

독일
- 양자 간 협상이 EU 집행위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
- 회원국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규칙이 더 쉽게 준수되고 집행될 수 있음.
- 공통 수치 기준(common numerical benchmark) 필요*.
  -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규칙이 필요.
  - 부채가 많은 국가에 연간 약 1%p(우려가 낮은 국가는 0.5%p)의 국가채무 비율 감축 요구.
  - *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등 10개국 공동 주장. 이 부분은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도 동의할 것으로 예상.
-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적자 및 부채 수준을 피하고, 시의적절하고 충분하게 감축할 필요.

반대 입장에 대한 이견

프랑스
-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자동 적용되는 공통 규칙이 꼭 존재할 필요는 없음.
- 적자 자동감축은 재정준칙 개혁의 취지에 어긋남.

이탈리아
- 공공투자에 충분한 관심이 중요. 녹색·디지털 투자에 대한 배려 필요.

벨기에
- 부채가 많은 국가의 경우 회원국 간에 차별화된 준칙 적용 필요.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 EU 집행위 개혁안을 지지하고, 더 많은 재정 제약에는 반대 예상.



독일과 프랑스는 EU 집행위의 재정준칙 개혁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왼쪽)과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 ©연합뉴스

는 대신 회원국의 다년간 지출 목표 준수에 집중하고, 회원국은 연례 안정성 또는 수렴 프로그램 및 국가개혁 프로그램 대신 이행에 초점을 맞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집행위 개혁안에 독일과 프랑스 의견 첨예하게 대립…
신규 준칙 합의 없을 경우 기존 재정준칙이 재발효될 우려

EU 집행위의 입법 제안에 대해 회원국들 간 의견이 크게 나뉜다(<표 2> 참고). 이견이 있는 주요 쟁점은 기존의 비현실적인 '20분의 1 감축 규칙'을 4년간의 부채감소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20분의 1 감축 규칙은 초과 부채를 연간 5%씩 축소하는 것이다. 해당 사항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지난해 6월 경제재정이사회가 개최되기 전날 독일을 포함한 총 11개국 공통의견 형식으로 집행위의 재정준칙 개혁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만 EU 집행위 입법 제안에 대해 통상 재정여건이 악화된 국가는 찬성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IMF에 따르면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7개국은 2024년엔 2개 기준값(재정적자, 국가채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의회의 경우에도 의원들의 소속 정당, 국가 노선에 따라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회 최대 다수당인 유럽 인민당(EPP)은 올바른 지표에 초점을 맞춘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유럽의회 세 번째 정당인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의원들은 집행위 제안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회원국들은 재정준칙 개혁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특히 일반면책조항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으로 신규 준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현실적이고 준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기존의 재정준칙이 재발효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와 회원국 간 이견 등을 감안할 때 지난 4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회원국)와 유럽의회가 각각 입장을 채택한 후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간 3자 협의가 완료돼야 합의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EU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EU 경제회복기금을 신설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에너지 위기 극복 및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재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물론 현재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코로나19나 전쟁이라는 외부 경제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EU가 재정준칙에 대해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나갈지는 EU의 재정통합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빠짐 없는 해양안전

매년 약 700건의 연안사고와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해양안전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반드시 들어야 할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

우춘희『깻잎 투쟁기』



얼마 전 정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비전문(E-9)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 의결안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같은 업종 내에서라면 전국 각지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기존의 권리를 축소하고, 9월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부터는 그들이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지역과 정부가 지정한 일정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지역 이동 제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사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을 3년간 3회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한 '3회 이동 제한' 조항도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로부터 '기본권 침해'라는 강한 비판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지역 이동 제한'이 더해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왜 정부는 사업장 지역 이동 제한을 의결한 것이며,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여기에 반발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든다면 부디 이주인권 활동가이자 연구자인 작가 우춘희가 쓴『깻잎 투쟁기』를 읽어주면 좋겠다. 솔직히 고백하면 나 역시 이 책을 읽기 전까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존중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참혹하고 위험천만한 주거환경과 노동환경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막연하게 알았을 뿐이지, 제도나 법이 이토록 촘촘하게 오직 고용주인 한국인들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이주노동자들의 희생, 아주 많은 경우 한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고 '일생'이 좌지우지되는 타살에 가까운 희생을 잔인한 방식으로 견고하게 착취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초과된 이주민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을 불법적인 존재로 낙인찍어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기에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과(정말이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오해란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미등록 이주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불공정한 법과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존재로서 미등록 이주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제도적 보호와 권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싸워야 한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알았다.

'왜 이렇게까지 몰랐을까' 자책을 넘어 의문이 들 무렵 우춘희를 비롯한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말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와 삶처럼 눈에 띄지 않게 묻혀 있고 외면받는 사회문제도 잘 없다고. 대부분이 동네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비닐하우스 근처나 논밭 근처에서 거처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고립돼서도 그렇다. 그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사업주 말고는 한국인들을 거의 못 만나기에 차별당한 경험이 없다"라고 답했다는 부분에서 그들이 고립된 정도가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다. 그들이 없이는 한나절의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들의 노동이 삶 곳곳에 이렇게나 가까이 스며 있는데. 그러니 부디 이 책을 열고 그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들이 겪는 불합리에 함께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물인 각종 농산물이 올라온 밥상 앞에 앉았었다면 더더욱.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인력'이 되어 우리 사회의 노동력 빈칸을 메우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오는 사람들이다. 그 보따리 안에는 삶도 있고, 꿈도 있고,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밥상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p.15

김혼비 에세이스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아무튼, 술』, 『다정소감』 저자
vgbd81@hanmail.net

한계상황, 돌파보다 돌입

고통의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고 고통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괴로움이 커다란 벽처럼 느껴질 때, 막막해 길이 아예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슬픈지, 화가 났는지, 힘이 드는 것인지, 어째서 그런 것인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느끼고 있는지 말로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풀어낼 수 없기에 고독하고, 내가 겪고 있음에도 알 수 없으며, 소화되지 않는다. 소화되지 않기에 고통은 계속된다.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를 '한계상황(Grenzsituation)'이라 칭한다.

우리는 어째서 한계상황을 맞게 되는 것일까? 일종의 번아웃 같은 걸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을 돌보며 살면 한계상황에 빠지는 일이 없을까? 이런 물음은 한계상황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과 연결돼 있다.

야스퍼스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커다란 일 같은 것이 우리를 한계상황에 놓이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한계상황이 반드시 크고 분명한 계기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한계상황은 특정한 사건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특수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지의 문제라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만남에는 이별이 따른다'는 진술은 맞는 말이지만, 나의 삶은 그 한마디 말로 축약될 수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다는 생로병사도, 이별의 슬픔도 내가 겪는 것과 네가 겪는 것, 그가 겪는 것은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그 일을 나의 삶의 일부로 직접 겪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아픔이 똑같은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같은 생명일지라도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으로 대체될 수 없듯, 내가 겪는 아픔은 오직 나만이 겪는 일이다. 내 슬픔은 나만의 것으로 내게 경험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척도로 규명해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원인을 짚어 설명할 수 있고, 파악해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상태를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계상황이란 말 그대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나 대응방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미리 알 수도, 대비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문제를 제거할 수도 없다. 모르는 척 지나갈 수 있었다면, 애초에 '한계'로 느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벽에 부딪힌다는 것이 내 삶의 끝을 뜻하진 않는다. 한계상황은 내 삶을 지탱하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계선을 그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야스퍼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상황을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몫으로 인정하고 감당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미 부딪힌 인생의 벽을 없는 셈 치는 것, 혹은 기존의 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상황에 들어왔다면, 이미 벽에 부딪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낯선 오늘과 내일을 살고 또 겪어내며, 나의 새로운 경계선이 구축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밀물과 썰물이 들고 나며 바다의 경계선이 새로이 그려지듯이, 우리의 한계상황도 우리 삶의 경계를 새로이 그리면서 다시 삶의 일부로 포함되고, 소화될 수 있다. 한계상황은 돌파해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새로이 겪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일부다.

지금껏 소화할 필요조차 없던 일을 소화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경계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희미해지고 덧그려지는 경계 앞에서 망연하고 지친 나를 너무 몰아가거나 분노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여전히 살아 있고, 나의 삶을 살고 또 겪어내는 중이다.



허유선
『인생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철학할 것』 저자
jhheo@oztechwide.com

왜 지금 인도네시아인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 1호 대상은 어느 나라였을까? 놀랍게도 그 국가는 세계 경제규모 1위이자 70년간 동맹 관계를 유지한 미국도, 최근 20여 년간 한국의 수출시장 1위였던 중국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국 일본도 아닌 인도네시아다. 당시 정부의 차관을 지원받은 우리 기업 K사는 칼리만탄 지역 개발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해 1968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관한 관심은 뜨거웠다. 한국 조미료 1호로 유명한 종합식품기업 D사는 1973년 인도네시아에 바이오 생산공장을 수출했다. 국내 기업 최초의 해외 플랜트 수출이었다. D사는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하며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본격화했다. 이후에는 신발, 봉제, 악기 등 노동집약적 산업 기업들이 인건비가 덜 드는 생산기지 확보 차원에서 인도네시아를 찾았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2억7천만 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한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다.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생산기지를 세우거나 현지 회사들과 합작 투자법인을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 적극 진출했다.



지난해 3월 16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브카시의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의 수출을 기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원 부국이자 아세안 핵심 시장으로 전 세계 이목 쏠려…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데다 1인당 GDP도 빠르게 성장

최근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데다 아세안의 핵심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사 H그룹은 국내 배터리 제조사 L사와 인도네시아 현지 배터리셀 공장 설립을 위한 1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2021년 체결했고, 2024년부터 전기차 15만 대분의 전지를 양산할 계획이다. 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세계 1위 보유국 인도네시아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 현지 이차전지시장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글로벌 핸드폰 제조사 S사는 중국 생산공장 철수 이후 집중된 베트남 생산 비중을 축소하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생산을 기존 대비 50~70%까지 늘리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세계적인 전기차 제조사 T사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종합화학기업 독일 B사도 프랑스 광산업체 E사와 함께 26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네시아 현지 니켈 제련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니켈 벨류체인 종합기업 N사는 2021년 인도네시아 최초의 이차전지용 니켈 습식제련공장을 설립했으며, 한국의 철강기업 P사와 합작해 연간 생산 12만 톤 규모의 니켈 중간재(MHP) 공장을 세우고 2025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도네시아의 매력은 무엇일까? 우선 인도네시아는 유망한 거대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다. 올해 7월 기준 인도네시아 인구는 약 2억7,760만 명으로 인도,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4위다. 유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

구는 2045년까지 약 20.2% 늘어 3억2천만 명의 초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처음으로 2천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0년 3천 달러, 2019년 4천 달러를 넘어섰다. 글로벌 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가 올해 5천 달러를 돌파하고, 2027년에는 7천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잠재 소비자가 많은 데다 빠르게 성장하는 1인당 GDP로 구매력 또한 커지면서 인도네시아는 소비재 기업들이 주목하는 차기 수출시장이자, 금융 및 프랜차이즈, 문화콘텐츠 등의 서비스산업 기업들이 앞다퉈 선점하고 싶은 시장이 됐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단일국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교도를 보유한 국가다.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제조, 가공, 유통 등이 이뤄진 할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슬람협력기구(OI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약 2억2,960만 명의 이슬람교도가 있으며 할랄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840억 달러에 이른다.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이슬람 경제지표(GIEI)에서 종합 4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샤리아(이슬람 율법) 경제벨트를 이끄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2019~2024년 인도네시아 샤리아 경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할랄 특화 산업단지를 건립하는 등 할랄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 기업들에 인도네시아는 할랄 상품과 관련한 좋은 테스트베드이자 약 21억 명 규모의 글로벌 무슬림시장으로 나아가는 창이 될 것이다.

세종시를 롤모델 삼아 행정수도 이전 진행 중으로 연 500억 달러 규모 해외 건설사업 발주

인도네시아는 한국 제1의 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기업은 97개국에서 580건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그 액수가 총 310억 달러에 달한다. 그중 11%인 36억7천만 달러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주됐다. 인도네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한국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장 1위에 오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3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총 4단계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내년까지 대통령궁과 주거단지, 전력, 수도, 도로 등 주요 수도 인프라를 건설하고, 2035년까지 중앙행정부와 주요 경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세종시가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의 롤모델이 됐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과 관련한 건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IT, 문화 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을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7년까지 매년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서 파생될 연 5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구성했다.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수주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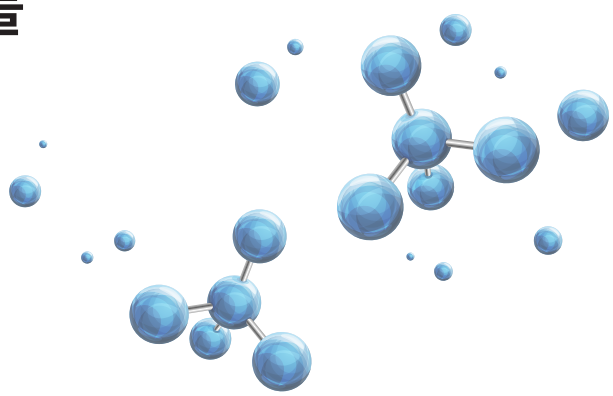
또한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 부국으로 최근 니켈, 보크사이트 등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세계금속통계국(WBMS)에 따르면,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약 21%가 인도네시아에 매장돼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2019년 니켈 원광석 수출을 금지했다. 이는 자원산업을 고도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외 기업들이 단순히 싼 값에 니켈을 사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에 니켈 제련에서부터 이차전지·전기완성차 생산에 이르는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고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기차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자원시장에 투자하면서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4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는 첫해다.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공급망, 경제 안보 등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각 분야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 인도네시아와의 향후 50년 더 깊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함께하길 기대해 본다.



고창현
KOTRA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 과장
chk@kotra.or.kr

10대 시절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



살다 보면 10대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상당히 쓸모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 일이 있다. 기억을 쥐어짜면 머릿속 한 구석에 이런 정보가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다',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붙어 있는 분자다',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물은 날아가고 소금(염화나트륨)만 남는다' 등.

최근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는 데에도 이런 과학 상식이 아주 유용하다. 예를 들어, 혹자는 일본이 바다로 방류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삼중수소 때문에 한반도 서남해안에서 만드는 천일염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고 한다. 급기야 다른 여러 사정까지 겹쳐서 천일염 사재기 같은 소동까지 벌어졌다.

자연계에서 방사성 삼중수소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방사성 삼중수소 1개가 포함된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붙어서 물이 되어 있다. 삼중수소가 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미국 등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거르지 못하고 희석해서 바다로 내놓는다. 당연히, 후쿠시마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삼중수소도 희석된 물의 형태다.

만에 하나, 그 삼중수소가 포함된 바닷물이 북아메리카로 가는 북태평양 해류를 반대로 거슬러서(!) 한반도 서남해안의 염전에 갇혔다고 치자. 햇빛을 받으면 그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은 수증기가 돼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그러니 물이 제거되고 바닥에 남은 소금(천일염)에 방사성 삼중수소가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

방사성 삼중수소의 다른 위험도 마찬가지다. 삼중수소는 자연계에도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이라서 매년 전 세계에 내리는 비나 눈에 약 250g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 동해안에 내리는 비나 눈에 포함된 양만 5g 정도가 된다. 그렇게 비나 눈에 포함된 삼중수소로 동해의 방사능 오염을 걱정한 적이 있던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약 2.2g 정도다.)

그렇다면, 장기적 위협은 어떨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10대 때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개념 하나를 알아야 한다. '자연실험.' 가끔,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아주 많은 변수가 개입하는 탓에 그 결과에 아주 불확실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불확실한 위험의 결과를 자연 상태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실험이다.

방사성 물질, 복잡한 해류, 해양 생물의 먹이사슬, 바다의 자정 작용 등이 얽힌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이 그랬다. 전 세계 과학자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2년간 속수무책으로 독성이 강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모습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2013년 3월 말부터 정화 장치 가동!)

갑작스러운 사고 탓에 바다로 흘러들어간 독성 강한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미치는 위험을 12년간 전 세계가 평가했다(자연실험).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해양 방사능 오염을 모니터링하고,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도 정기적으로 점검했다. 놀랍게도 지난 12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태평양의 자정 작용은 경이로웠다. 인류는 운이 좋았다.

다행히 방사성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붕괴해서 독성이 약해진다. 지난 12년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정화 장치로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거르고 나서, 2.2g 정도의 삼중수소를 바닷물로 희석해서 30년에 걸쳐서 조금씩 내놓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을 저마다 판단할 수 있으리라.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imtyio@gmail.com

*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철 복숭아

올해도 신비복숭아는 광풍이었다. 속은 백도의 맛이 나고, 껍질은 털이 없는 천도복숭아다. 외국 품종인데 누군지 작명을 기막히게 잘했다. 먹기 간편하면서 반전 속살을 지닌 복숭아 등으로 알려지며 6월 복숭아 시즌의 시작을 여는 요란한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나 역시 복숭아를 무척 좋아한다. 여름마다 복숭아 먹는 낙으로 더위를 견딘다. 다채롭고 깊은 그 예쁜 향을 견딜 수 없다. 게다가 복숭아는 질리지도 않는다.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복숭아는 털복숭아(peach)와 천도(승도)복숭아(nectarine)로 크게 나뉜다. 털복숭아는 다시 백도와 황도로 나뉘고 '딱복'과 '물복'으로도 나뉜다. 분류도, 품종도 다양하다. 대개 노지에서 재배하는 복숭아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로 짧기 때문이다. 수확한 복숭아는 노화를 촉진하는 에틸렌 가스를 스스로 내뿜어 사과나 배처럼 저장해 두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니 복숭아 과수원들은 한 가지 품종을 많이 심어 한꺼번에 수확하는 것보다는 여러 품종을 심어 분산된 기간에 분산된 양을 출하하는 쪽을 택한다. 아무리 작은 농장이라도 대여섯 가지 품종은 기본으로 재배한다. 그 덕분에 시장에는 복숭아 품종이 그 어떤 과일보다도 다양하게 넘쳐난다. 품종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향, 맛, 질감, 수분도 등 다양한 요소의 조합으로 무한대의 서로 다른 개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하여 매해 여름 이 품종 저 품종 옮겨 타며 복숭아를 즐긴다. 6월 하우스 복숭아로 시작해 9월 만생종까지 복숭아를 제대로 먹자면 수십 가지 품종을 섭렵할 수 있다. 향기 좋은 황도 '치요마루'는 빨리 수확하는 것 중 가장 맛있는 복숭아다. 쫀득한 백도 '유명', 딱딱이 백도 '경봉', 향 진한 백도 '그레이트', 향수 그 자체인 '강황도' 등이 유명 품종 중 챙길 만한 품종이다.



본격적으로 맛있는 복숭아는 8월부터 시작된다. 과일이든 곡식이든 무엇이든 만생종으로 갈수록 맛있어지니까. 나무에 오래 매달려 시기를 기다린다는 낭만은 덤이다. 8월부터 나오는 품종 중 향이 좋고 달콤한 백도 '선미', 가을 신비복숭아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속이 흰 천도 '설홍' 같은 국내 육성 품종은 꼭 한번 먹어볼 만하다.

요사이 열풍인 납작복숭아도 복숭아 먹는 재미를 더한다. 일반 복숭아와 달리 도넛처럼 납작하게 눌린 모양을 한 복숭아다. 속의 씨가 상대적으로 작아 먹기도 한결 편하다. 일반 복숭아처럼 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백도와 황도로 품종도 다양하다. 5~6년 전까지만 해도 '거반도'라고 하는 중국계 털 있는 백도가 유일했는데, 최근엔 '황유반도' 등 품종이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런 납작 복숭아를 포함해 몇 가지 인기 품종이 고정되면서 '복케팅'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나처럼 복숭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정 품종을 사려고 치열하게 경쟁한다. 주문이 열리면 몇 초 만에 동이 나 여느 아이돌 콘서트 티케팅 못지않다.

비가 많은 올 7월은 복숭아에 엄혹했다. 어느 작물이나 그렇지만 복숭아는 수확 직전 일조량이 무척 중요하다. 색도, 맛도, 향도 잘 익기 위한 첫째 조건이다. 올해는 흐리고 온통 비다. 수확기에 비가 오는 것도 최악이다. 맛이 차올랐다 해도 죄다 비에 희석된다. 이제까지 올해 복숭아는 예년만 못했다. 가락시장 새벽 경매에 참관해 복숭아들을 시식해 봐도 '전멸'이었다.

내가 운영하는 다품종 과일가게 '계절미식'과 함께 일하는 농장들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나주의 농장은 특히 심각해서 집중호우 기간에 수확기를 맞은 몇몇 품종은 출하까지 포기하겠다고 할 정도였다. 1년 농사를 스스로 포기하다니, 얼마나 속이 상할까. "하늘이 주는 만큼만 받아야죠"라고 하는 남원의 농장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저희는 이만하면 나은 편이니 다행으로 여깁니다"라는 충주의 농장도 행간에서 피해를 가늠할 수 있었다. 누구나 속상함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8월의 복숭아가 무사히 맛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이해림 푸드 칼럼니스트
『탐식생활』 저자, 다품종 과일가게 '계절미식' 운영
contents.forte@gmail.com

장바구니에 담기기 시작한 B급들의 생태계

고물가 시대다. 이제 웬만한 커피전문점은 음료 한 잔에 5천 원 이상의 가격을 지불할 생각을 하고 방문해야 하고, 마트에 가면 10만 원은 우습고 20만 원도 금방이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소비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철마다 다른 의복이 필요하며, 매일 식탁에 올릴 식재료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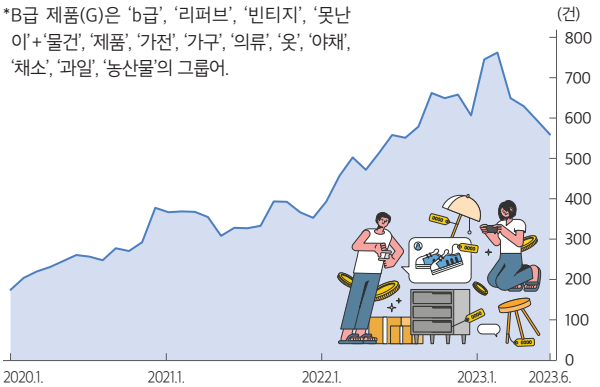
고물가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똑똑해진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시장이 있다. 바로 리퍼브와 빈티지 그리고 못난이 농산물 이야기다.

리퍼브는 'refurbished product'의 한국어 표기로, 작은 하자나 단순 변심 같은 이유로 반품된 상품을 다시 손질하거나 새롭게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새 제품보다 20~30% 저렴하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지금 리퍼브 제품의 인기에는 다양성의 증대가 큰 역할을 했다. 가속화된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은 재고와 반품 물건까지도 늘렸고, 이들이 리퍼브시장으로 들어오며 다양성을 확대한 것이다. 예전엔 휴대폰,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던 반면 최근에는 리클라이너, 유아차, 벙커침대 등 훨씬 다양한 제품을 찾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제품의 다양화로 더 다양한 소비자가 들어오게 되고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는 것이다.

의생활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상승 중인 트렌드가 빈티지다. 빈티지시장의 부상은 접근성 개선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예전에 빈티지 제품 쇼핑이라고 하면 어수선한 분위기의 매장에 무작위로 진열돼 있는 물건들 속에서 보물을 찾듯 쇼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목과 체력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개성 있는 빈티지 숍 주인장이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을 고스란히 반영한 물건, 디스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어 소비자는 제품이 아니라 나와 취향이 비슷한 빈티지 숍을 고르면 된다. 게다가 최근에 생겨나는 빈티지 숍은 온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도 훨씬 높아졌다. 이전보다 편리해졌기에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생활에서도 대안적 소비가 뜨고 있는데 못난이 농산물이

<그림> 'B급 제품(G)'* 언급량 추이(10만 건당)



자료: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트위터·블로그·커뮤니티·인스타그램 (2020.1.1.~2023.6.30.)

그것이다. 못난이 농산물은 맛과 영양 등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모양이 비대칭이거나 작은 흠집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뜻한다. 못난이 농산물 전문 유통서비스의 등장으로 예전 같으면 그대로 버려졌을 농산물이 소비자를 만날 수 있게 됐다. 못난이 농산물이 지금 소비자와 공명하는 지점은 본질에 충실함이다. 2020~2021년과 2022~2023년 못난이 농산물의 감성 키워드를 보면 '저렴한 가격', '돕다', '해결하다' 같은 키워드는 하락하고 '신선한', '좋아하다', '건강하다' 등의 키워드가 상승하는데, 이는 못난이 농산물 소비가 농가를 위한 윤리적 선택이기보다 식품의 본질인 맛과 건강을 충족시키는 본질에 가까운 소비로 변화했음을 뜻한다. 다른 누구보다 나를 위한 선택이기에 못난이 농산물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렴하면서도 본질에 충실한 B급 물건들을 한층 편리하고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B급 생태계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이제는 대중화된 중고 거래처럼 B급 물건 소비도 보편적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 귀추를 주목해 보자.



신수정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수석연구원
『트렌드노트』 시리즈 공저자
sjshin@vaiv.kr

섬세하고 날 선 노래로 요즘 청춘의 감정을 훑다



라우브의 데뷔앨범 <~how i'm feeling~> 커버. ©Studio album by Lauv

가끔 한국에서 유독 사랑받는 작품이 나오곤 한다. 지난 6월 개봉한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이 그런 경우다. 픽사가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 세계적으로도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기세가 대단하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히트하고 나면 내 입장에서는 반가운 현상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요즘 <엘리멘탈>의 주제가인 'Steal The Show'를 라디오 신청곡으로 받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 곡은 멜론 '톱 100'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노래를 부른 가수는 라우브(Lauv)다.

낯선 이름일 수 있다. 대체 누구야 싶은 독자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라우브는 현대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다. 만약 라우브가 낯설다면 저 유명한 BTS를 경유해도 괜찮다. BTS와 라우브는 함께 두 곡을 작업했다. 'Make It Right'(2019)와 'Who'(2020)가 그것이다. 전자는 노스탤지어를 자극하는 멜로디가, 후자는 듣는 이를 단번에 설득해 내는 사운드스케이프가 인상적이다.

미국 출신이다. 본명은 아리 스타프랜스 레프(Ari Staprans Leff). 라우브라는 예명은 사자를 뜻하는 라트비아어 'Lauva'에서 따온 것이다. 본명인 아리(Ari) 역시 히브리어로 사자라고 한다. 본격적인 커리어의 시작은 2014년이었다. 그의 데뷔곡 'The Other'가 입소문을 모으면서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100에 진입한 것이다.

이후 행보는 다소 의외였다. 가수 활동을 잠시 접고 작곡가로만 일하면서 다른 가수를 위해 곡을 써줬다. 그러던 와중 2017년 직접 노래까지 한 'I Like Me Better'를 발표했는데 이게 소위 대박이 나면서 한국에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라우브가 일궈낸 많은 히트곡 중 'i'm so tired...'(2019)와 'Feelings'(2019)의 존재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i'm so tired...'의 경우, 한국에서 거의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로이 시반(Troye Sivan)과 함께 한 결과물인데 그의 음악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하다. 좀 더 면밀히 조감하기 위해 그의 또 다른 히트곡 'Modern Loneliness'의 다음 노랫말을 살펴보자.

"혼자인 적은 없지만 우린 언제나 우울해/내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전화도 문자도 안 해"

라우브는 유튜브 시대가 낳은 스타라고 불린다. 즉,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본격적인 수혜를 받은 세대의 정서를 대변하는 뮤지션이라 볼 수 있다. 음악 속에서 라우브는 한없이 외로운 마음을 드러내다가도 'I Like Me Better'에서처럼 사랑에 빠진 달콤한 감정을 노래한다. 그러면서도 'Drugs & The Internet'(2019)에서는 "내 친구들을 약과 인터넷과 바꿨지"라면서 분열적인 자아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For Now'(2020)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재치 있게 그려낸다. 국내에서 비만 오면 신청곡이 들어오는 'Paris In The Rain'(2018)의 고독과 우울 역시 라우브 음악의 요체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다. 요컨대 라우브는 음악을 통해 요즘 청춘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감정을 섬세하게 훑는다. 그의 음악에 대중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가장 큰 바탕이다.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미디어 세대의 정서를 가사로 실어 나르는 와중에도 그가 현대적인 곡 쓰기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가 추구하는 멜로디와 사운드는 딱 한마디로 정의해 세련미의 끝판왕이다. 멜로디의 결이 살아 있으면서도 최신의 감각 또한 매력적으로 뾰족하게 날 서 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굳이 가사를 몰라도 음악을 즐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가 음악으로 포용하는 대중성은 세대 따위 훌쩍 뛰어넘는다. MZ세대가 아니라도 주저 말고 라우브의 세계에 빠져보기 바란다. 어쩌면 오는 8월 29일 열릴 그의 내한 공연 티켓을 예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배순탁 음악평론가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
greattak@hanmail.net

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웹진 <소비자시대> 2023년 8월호 '상품 테스트'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어린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별 유산균 수와 종류 차이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이의 면역력 증진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어린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 프로바이오틱스 18개 제품(분말형, 츄어블형)의 품질, 안전성 등을 비교시험했다.

글 **김수정**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책임연구원

어린이 프로바이오틱스 테스트 제품

제품명 / 판매사 / 분량 / 가격

분말형

BYO 식물유래 유산균 키즈 씨제이웰케어㈜ 1박스 30일 / 5,600원	**듀오락 유기농베이비** ㈜쎌바이오텍 1박스 30일 / 35,000원	**드시모네 키즈 스텝1 딸기향** ㈜혁토헬스케어 1박스 30일 / 54,600원	**락토비타** 네이처스팜㈜ 1박스 60일 / 100,000원
락토핏 키즈 종근당건강㈜ 1박스 60일 / 22,900원	**세노비스 어린이 수퍼바이오틱스**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1박스 30일 / 38,000원	**쎌티아이 키즈** ㈜셀로닉스 1박스 30일 / 50,000원	**유기농 장대원 키즈 프로바이오틱스** 대원제약㈜ 1박스 30일 / 16,900원
잘크톤 쑥쑥 면역 생유산균 조아제약㈜ 1박스 30일 / 28,125원	**파스퇴르 아이생각 키즈 생유산균** 롯데푸드㈜ 1박스 60일 / 33,500원	**연세 키즈텐 어린이 프리미엄 유산균 아연** 연세대학교연세생활건강 1박스 30일 / 19,875원	**함소아 면역유산균 톡톡업** ㈜함소아제약 1박스 100일 / 70,000원
홍이장군 키즈랩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삼공사 1박스 30일 / 21,000원			

츄어블형

듀오락 얌얌 플러스 ㈜쎌바이오텍 1박스 40일 / 46,000원	**드시모네 곰돌이 츄어블 플러스** ㈜혁토헬스케어 1박스 30일 / 33,600원
아이배냇 꼬마 유산균 츄어블 아이배냇㈜ 1박스 30일 / 17,900원	**지큐랩 우리아이 유산균 멀티비타 츄어블** 일동제약㈜ 1박스 15일 / 29,000원
컬처렐 키즈츄어블 광동제약㈜ 1박스 30일 / 48,000원	

※ 국내 프로바이오틱스시장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소비자 1천 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구입 경험이 많은 상위 18개 제품을 선정.
※ 올해 3월 판매자 확인 가격이며, 구입 시기 및 할인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품질 테스트

Q 유산균 수, 기준에 맞게 함유돼 있을까?

A 17개 제품 기준 준수, 1개 제품 기준 미달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17개 제품이 1일 섭취량당 8억~310억 CFU* 수준으로, 건강기능식품 기준(1억CFU/g)에 적합. '지큐랩 우리아이 유산균 멀티비타 츄어블'이 310억CFU로 가장 많았고, '잘크톤 쑥쑥 면역 생유산균'이 8억CFU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아이배냇 꼬마 유산균 츄어블'은 유산균 수가 5,500만CFU(2,300만 CFU/g)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해당 업체는 제품이 현재 단종돼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CFU(Colony-Forming Unit)는 배양한 균이 자라나 형성한 집락을 확인해 균의 숫자를 측정하는 단위.

Q 제품에 첨가된 유산균 종류, 차이 있을까?

A 제품별 유산균 종류, 1~17종까지 다양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단일균종으로 이뤄진 제품은 3개이며, 나머지 15개 제품은 4~17개 균종으로 구성됨. 이 중 '락토비타', '잘크톤 쑥쑥 면역 생유산균', '아이배냇 꼬마 유산균 츄어블' 3개 제품이 가장 많은 17종의 균종으로 구성됨.

※ 단일균주 및 복합균주 종류와 함량이 효능에 비례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음.

Q 영양성분, 알맞게 표시돼 있을까?

A 섭취 연령에 맞게 영양성분 표시 필요

비타민, 무기질 등을 첨가한 제품들의 영양성분 표기를 확인해 보니 성인과 동일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기재하는 등 어린이 권장량보다 함량이 높은 제품들이 있었음. 지용성 비타민 등 일부 영양성분은 과량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아연은 과다 섭취 시 위장 및 면역기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A, D, E, K 등)은 과량 섭취 시 체내에 쌓여 호르몬 이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용성 비타민(B, C 등)의 경우 필요 이상 섭취 시 소변으로 배설될 수 있음].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이나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섭취 연령에 맞게 개선하도록 업체에 권고함.

섭취 연령의 권장량

영양성분 (단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3~5세**	6~8세**	9~11세**	12~14세**
비타민D(ug)	10	5	5	5	10
아연(mg)	8.5	4	5	8	8

* 식품표시를 위해 설정한 한국인 1인에 대한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
-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 1832호, 개정 2022.11.28.>

** 2020 한국인 연령별 영양소 섭취기준.
-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 기준<법률 제17472호>

안전성 테스트

Q 어린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안전한가?

A 대장균군과 이물 검사 결과, 전 제품 안전기준 적합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장균군과 이물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

표시 적합성 테스트

Q 첨가된 균주와 제품에 표시된 균주가 일치하는가?

A 일부 제품, 첨가된 유산균과 표시 달라

유전자분석 확인 결과, '함소아 면역 유산균 톡톡업' 제품에 실제 함유된 유산균과 제품에 표시된 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 브리브)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해당 업체에 개선을 권고함. 해당 제품 판매자는 2022년도 생산제품에 원료 균주명이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회신함.

가격 비교

Q 제품별 가격, 차이 있는가?

A 1일 섭취량 기준 최대 10배까지 차이 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가격은 유산균 종류, 무기질과 비타민 등의 첨가에 따라 차이가 남. 단일균주 제품 중에는 'BYO 식물유래 유산균 키즈'가 1일 섭취량 기준 가격이 18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컬처렐 키즈츄어블'이 1,600원으로 가장 비쌈. 복합균주 제품은 '락토핏 키즈'가 1일 섭취량 기준 가격이 382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지큐랩 우리아이 유산균 멀티비타 츄어블'이 1,933원으로 가장 비쌈.

어린이 프로바이오틱스 구매 및 섭취 가이드

- ☑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유산균 수를 확인한다.
- ☑ 아연, 비타민 등 복합 영양성분 첨가 여부를 확인한다.
- ☑ 제품 유형과 섭취량을 확인한다.
- ☑ 보관방법을 확인한다.
- ☑ 일일 권장 섭취량(성인과 어린이 모두 1억~100억CFU)을 지킨다.
- ☑ 특정 의약품과 병용 섭취는 주의한다.
- ☑ 구매 후에는 1일 섭취량을 지켜 최대한 빨리 섭취한다.
- ☑ 복통, 발진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추억을 여행가방 삼아 떠난다

<남과 여>, 코코 샤넬 그리고 <007 카지노 로얄>의 그곳

글 **정여울** 작가 suburbs@naver.com



노르망디의 도빌 해변. ©이승원 작가



"텅 빈 해변에서
석양과 함께 외출하는 것은
진정으로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영화배우 잔 모로

하와이에 와이키키 해변이 있다면 노르망디에는 도빌 해변이 있다. 프랑스 노르망디 도빌은 1966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남과 여>의 배경이 됐던 곳이고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속 아름다운 휴가 장면의 배경이 되기도 했으며, 영화 <007 카지노 로얄>에 영감을 준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도빌은 코코 샤넬이 '모자'에서 '옷'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첫 번째 장소이며, 자신의 두 번째 매장을 열어 패션업계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만큼 청명하고 푸르른 하늘,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모래가 풍부한 해변의 백사장, 사진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왠지 가슴 설레고 들뜨는 기분이 드는 전형적인 휴양도시, 도빌.

'이상적인 여름휴가'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야말로 새파란 하늘에 은빛 모래가 눈부시게 반짝이는 이미지를 연상하곤 한다. 티끌 한 점 없이 푸르른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 새하얀 모래가 지친 현대인들에게 손

짓하는 그곳.

진정한 휴식, 저마다의 행복

그런데 나는 막상 그런 곳에 가면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른다. 수영도 할 줄 모르고, 선베드에 누워 햇살을 즐기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여행이라고 하면 '열심히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는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글을 쓰기 위해 바지런히 움직여야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휴양지에서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는 것은 이상하게도 어색하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안 하는, 진정한 휴식'이라는 개념이 나에게는 아직도 어렵고 낯설다.

그랬던 내가 도빌에서는 진심으로 '전형적인 피서객'처럼 휴가를 즐기고 싶어졌다. 도빌 해변에서 저마다의 눈부신 휴식과 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빌은 내가 가본 어떤 해변보다 하얗게 반짝이는 백사장을 지니고 있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야말로 모래 언덕 속으로 푹푹 빠지는 듯한 그 휘청휘청한 느낌조차 좋았다. 백사장의 모래층이 워낙 두꺼워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속도를 낼 수가 없다. 이곳에 가면 햇빛도 무한대, 아름다운 바다도 무한대, 우리가 뛰놀 수 있는 모래도 무한대라는 생각이 들어 그야말로 마음이 한껏 풍요로워진다.

여행이 끝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여행계획을 짰는지 깨달을 때가 있다. 도빌 여행도 그랬다. 이 아름다운 도빌에서 우리 일행은 마음껏 즐기지 못했다. 내가 일정을 무리하게 짰기 때문이었다. 나는 도빌 시립 미술관도 가고 싶고 다음 여행지인 몽생미셸에 무사히 가기 위해 준비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밀린 원고까지 많아서 도저히 해변의 여유를 만끽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거짓말처럼 아름다운 도빌의 해변은 내 머릿속에 마치 문신처럼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다. "도빌에 하루만 더 있을걸, 아니 이틀만 더 있을걸, 아니 도빌에 한 일주일 머물걸 그랬어." 나는 혼잣말을 하며 안타까워했고, 일행들은 혀를 끌끌 찬다. "넌 항상 그러더라. 여행하면서도 늘 일하느라 바빠. 그게 여행이니?"

"이게 요새 유행한다는 그 워케이션(work+vacation)이구나, 일하면서 여행하는?" 나는 문득 머쓱해진다. 워케이션, 그런 것은 원하지 않는데. 난 진심으로 '바캉스'를 원했다. 바캉스(vacance)는 '비움'을 뜻한다고 한다. 나의 원래 자리를 비우고 낯선 휴양지에서 최대한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울까. 머릿속이 온통 일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다.

여행 짐을 풀어보니 '바캉스룩'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 매년 '수영을 꼭 배우고


1



1 노르망디의 도빌 항구.
2 도빌 해변 해상구조대.

야 말겠다'며 다짐해 보곤 했지만, 늘 일에 밀려 뒷전이었다. 온갖 책들과 노트북, 필기구, 카메라, 파일과 전선이 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놀이와 휴식을 위한 준비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때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명언이 떠올랐다. 여행자를 위한 준비물의 목록은 '사물들'이 아니라 '기억과 지식'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만 소유하십시오: 언어를 알고, 국가를 알고,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추억을 여행가방으로 삼으십시오."

정말 그렇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가도 현지 사정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특히 무겁거나 비싼 물건을 가져가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챙기느라 여행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그 나라에 대한 지식, 언어 그리고 여행의 추억이야말로 최고의 '여행 준비물'이었던 것이다. 내 짐은 더욱 가벼워져야 했고, 굳이 뭔가 준비물을 더하자면 놀이와 휴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준비물(수영복이나 비치볼 같은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내게 주어진 여행의 쓸모

노트북만 가져가지 않는다면, 무거운 카메라만 가져가지 않는다면, 정말 행복하고 가벼운 여행이 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부풀지만 여행이 곧 취재인 작가의 삶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꿈이다. 하지만 솔제니친의 멋진 조언에 따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즉 지식과 감성과 추억만을 잔뜩 머릿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멋진 여행자가 됐으면 좋겠다. 도빌의 아름다운 해변을 마음껏 즐기지 못한 대신, 나의 책 『여행의 쓸모』 표지 이미지로 도빌 해변에서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넣게 됐다. 나는 도빌에서 신나게 뛰어놀지 못했지만, 도빌에서 아름다운 한때를 보낸 사람들의 이미지는 영원히 내 마음과 내 책 표지 위에 살아남아 반짝이게 됐다.

도빌에 다녀온 뒤 여행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꿨다. 마침내 인정하게 됐다. 더 많은 것을 구경하고 탐구하기 위한 여행도 좋지만, 때로는 쉼과 놀이가 있는 여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행조차 일이 돼버리면 그 아름다운 시간의 의미가 퇴색하기 쉽다는 것을. 존 스타인벡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책이고, 여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책 속의 한 페이지만 계속 반복해 읽는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 속에서 오직 '일상'이라는 한 페이지만 읽고 산다면 얼마나 갑갑할까.

여행지에서는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끄고 오직 나의 몸과 마음으로 그곳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여유를 지닌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채로운 공간과 시간의 이미지와 향기로 가득 채워 넣어 보고 싶다.

첨단기술 '딥리스킹' 시대의 경제안보 전략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5월 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의 최대 이슈는 대중국 정책이었다.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과 일본은 강도 높은 대책을 시사했지만, 결국 G7 국가들의 최종 입장은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디커플링)하는 것이 아니고 디리스킹(de-risking)하는 것이었다.

사실 디리스킹은 '탈위험' 혹은 '위험 줄이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 주도로 G7이 합의한 대중국 대응방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첨단기술에 대한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디리스킹보다는 첨단기술 '딥리스킹(deep risking)'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군사안보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의 합의다. 물론 G7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상품 생산과 국제무역의 절대강자인 중국이 상품을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논의됐다. 하지만 첨단기술 딥리스킹에 비하면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

과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고관세 부과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으로 미국 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중국이 생산한 값싼 범용 상품을 무리하게 대체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부추길 것이 분명했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식 디커플링 정책에 적지 않은 고민을 해왔다.

EU의 사정은 미국보다 더 복잡했다.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 왔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웠다. EU의 최대 주주인 독일과 프랑스가 중국과의 비즈니스 거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야기하는 국가안보적 위협에 EU가 대응해야 한다는 압력이 고조됐다.

즉 EU는 중국과 경제교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동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이에 EU를 대표하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서방세계의 첨단기술이 중국 등 우려 국가로 유출되는 것은 방지하면서 경제 의존의 무기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디리스킹'으로 규정하게 됐다. 그는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서 디리스킹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얼마 후 중국 전문 연구기관인 독일 메르카토르중국학연구소(MERICS)에서의 강연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의 경제 강압, 경제적 종속의 무기화,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수출통제와 투자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공개강연을 통해 대중국 정책을 밝혔다.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내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는 한편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중국과의 첨단기술 격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EU와 대중국 정책의 접점을 맞춘 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보안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세계 기술 선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관리 체계를 종합 점검해 딥리스킹 시대에 부합하는 경제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보세요

1990년에 창간한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나라경제』를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나라경제』의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nara.kdi.re.kr
www.facebook.com/kdinara1990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잡지를 읽고 난 소감, 제안 등을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nara@kdi.re.kr)로 보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2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심야책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Bookstore Association